

---

#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Ⅱ

- 연대경험의 분석과 연대발전의 방향 -

---

조돈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목 차 >

제 1 장 머리말 .....	1
제 2 장 신사회운동 :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과의 연대 .....	4
1. 노동운동과의 연대 필요성 .....	6
2. 노동운동과의 연대 선호도 .....	9
3. 노동운동과의 연대 평가 .....	11
4. 노동운동과의 연대 필요성 .....	B
5.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과의 연대 .....	B
제 3 장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 연대경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 20	
1. 정치부문 .....	21
2. 경제부문 .....	25
3. 노동운동 지원부문 .....	29
4. 연대의 활성화와 균등발전 .....	33
5.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들 .....	39
6. 연대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자세 .....	41
제 4 장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 연대경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 43	
1. 여성노동자 문제 .....	44

2. 노동자 일반의 문제 .....	48
3. 여성문제 일반 .....	54
4. 연대의 활성화와 불균등 발전 .....	56
5.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들 .....	61
6. 연대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자세 .....	64
제 5 장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 연대경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	66
1. 반핵 영역 .....	67
2. 환경보전 영역 .....	69
3. 연대의 부진 및 원인 .....	74
4. 연대의 발전 가능성 및 전략 .....	79
5. 연대활동 모범사례로서의 울산지역 .....	82
6. 연대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자세 .....	84
제 6 장 연대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분열 .....	86
1. 노동운동의 전향적 자세 .....	86
2. 노동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의 요청 .....	88
3. 연대발전의 최대 장애물 : 노동운동의 분열 .....	89
4. 연대대상으로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	91
5. 노동운동의 통합을 향하여 .....	94
제 7 장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 : 현안 및 방법론 ·····	96
1. 연대의 방식과 단계 .....	96
2. 연대의 원칙 .....	102
3.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 영역들 .....	105

제 8 장 연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 : 맺음말에 대신하여 .....	118
1. 연대간 차별성 및 차별적 전략의 필요성 .....	118
2.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 방향 .....	121
3. 노동운동에 대한 제언 :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	124
< 참고문헌 > .....	126
* 보고서를 마치며 .....	135
* 프로젝트 참여자 .....	137

## < 표 목차 >

<표 2-1> 노동운동과의 연대 선호도. ....	10
<표 2-2>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평가. ....	12
<표 2-3> 정부의 정책 평가. ....	14
<표 2-4> 자본에 대한 평가. ....	16
<표 2-5>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시각. ....	17

...

## 발간사

지난 10여년은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노동운동도 변화의 물결을 함께하였다고 하겠으나, 이 기간동안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회운동, 특히 소위 “신사회운동”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신사회운동이란,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노동운동과 더불어 사회변혁의 첨단에 서있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운동은 신사회운동의 발전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사회운동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노동운동은 신사회운동의 쟁점 영역들에 있어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짚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문제들에만, 노동조합들의 문제들에만 몰두하여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하고, 이제 노동운동도 사회문제 일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의 관심의 지평을 넓힐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친숙해져 가는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에 대하여, 노동운동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다. 노동운동은 노동 문제 이외의 문제들은 이차적 문제들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관심을 가질 부문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이 관심의 지평을 넓힘에 있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사회운동에 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에 관한 본 연구 프로젝트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연구원의 설립으로 뒤늦게나마 심도있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꼭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신사회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과의 대립적 성격을 부정하고 연대의 필요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은 변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맞서 함께함으로써 쌍방의 운동들이 발전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대는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들과의 연결고리들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하여 줍니다.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한 쟁점 영역들과 연대의 방식 및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본 연구 프로젝트에 노동운동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신사회운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고민한 결과로 얻어진 산물입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총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견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노력이 실천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의 사회변혁을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 3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인상

## 제 1 장

### 머 리 말

조 돈 문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프로젝트의 두 편의 보고서 중 두 번째 보고서이다.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불가” 명제가 허위임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연대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의 발전 이유는 노동운동 측에서의 집단이기주의 이미지 탈피 노력과 운동의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 신사회운동측이 사회변혁을 위한 연대 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점, 김영삼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사회운동 전반이 양극화 양상으로부터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수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보고서가 남긴 과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과제는 연대간의 차별성에 대처하여 연대별로 차별화된 연대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과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연대 발전의 방향 및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첫째 과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신사회운동들은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있어 연대의 활성화 정도, 부문별 불균등 발전 정도, 연대의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등에 있어 상당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연대별로 연대의 발전 양상을 분석하고, 연대 발전의 촉진 요인 및 제약 요인들을 규명하며, 나아가서는 연대별로 연대를 요하는 현안 영역들을 제시하고 연대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청되는 역할 및 자세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대별 발전 수준 및 특성에 적합한 발전 방향의 고찰은 본 보고서의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 행하여 질 것이다.

본 장들에서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과의 연대 경험을 평가하고, 연대 경험의 평가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펼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연대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부문에 관하여는 연대 발전의 긍정적 요인을 규명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연대가 부진한 부문에 관하여는 연대를 부진하게 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연대활동이 가장 부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경우 연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및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더하여, 개별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 영역들을 논의하는 한편, 연대 발전을 위하여 개별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에 요청하는 바람직한 역할 및 자세들도 제시한다.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제6장과 제7장에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 발전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대의 발전 방향, 전략 및 원칙 등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특히 신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에서 최대의 걸림들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분열 문제를 논의하고 극복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개별 신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청하였던 역할 및 자세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대의 방식 및 발전 단계들,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개별 참여 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 그리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이 연대하여 대처해야 할 현안 영역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 몇 가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이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첫 번째 보고서가 남긴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기초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신사회운동측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요인들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편,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에 대한 의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경험적 검증작업을 한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은 사회운동의 목표를 사회변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본에 대하여, 특히 독점자본인 재벌에 대하여 극도의 적대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불신하는 한편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을 매우 미흡하게 평가하고 있어, 국가와 자본을 사회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가에 대한 불신과 자본에 대한 적대감에 비하여, 노동이 국가와 자본과 대립되어 있는 노동문제 현안들에 관하여 친노동자적 입장을 취하는 등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은 친노동자적 성향을 표출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둘러싼 국가와 자본이라는 저항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연대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신사회운동의 현재의 발전 수준을 상대적으로 앞지르고 있어 그러한 대립구도의 형성이 점차 더욱 더 구체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맺음말을 대신하는 제8장에서는 연대 발전의 방향 및 전략을 연대간 차별적인 부분과 연대들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제언을 드림으로써 글을 맺는다.

## 제 2 장

### 신사회운동 :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과의 연대

본 장의 목적은 신사회운동 일반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발전의 잠재력을 크게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신사회운동 일반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이유들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다음, 신사회운동 단체들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의견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의견조사 분석은 먼저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선호하는지를 분석하고,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소속 신사회운동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와 연대의 결과로 얻는 것과 잃는 것 가운데 어느 편이 더 큰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선호 정도와 그 원인으로서의 연대에 대한 평가를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규정하는 소속 신사회운동 단체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지,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과 노동관계 정책들에 대하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자본가들, 특히 독점자본인 재벌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노동문제 현안들에 대하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사회운동은 사회변혁을 최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변혁을 위하여 국가와 자본이라는 변혁 저항 세력의 연합에 대처하여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배달녹색연합 등 6개 신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가들과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단체 구성원 의견조사”로 만든 자료이다. 유효 응답지 523부<sup>1)</sup>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사회운동들 상호간의 비교와 단체들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간 사례들의 분포를 동일하게 하고 단체별 활동가와 일반 회원간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있는지를 통계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선호도,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평가,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하겠다.

---

1) 본 설문조사는 1995년 11월 6일부터 다음해 1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해당 단체들과 협조하여 최대한 무작위추출법에 충실하도록 피조사자들을 표집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 설문조사 방법과 전화 설문조사 방법을 결합하여, 일차로 설문지를 우송한 다음 미회수 설문지들의 경우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고 설문지 작성 및 회수를 최소한 3차례 이상 요청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우송된 설문지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설문지를 다시 우송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944부였으며, 이들 가운데 설문지 반송, 주소 이전, 전화 결번, 전화연락 불가 등의 경우가 170부여서 실제로 배포된 설문지의 숫자는 774부이다. 이들 774부 가운데 각 사회운동 단체에서 배포하기로 한 것들 가운데 아직 배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문지들이 74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설문지 회수율은 현 상태로서는 산출할 수 없으며, 미확인된 단체 배포 설문지들이 모두 배포되었을 경우 본 설문조사의 설문지 회수율은 67.7%이며, 그 설문지들이 전혀 배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설문지 회수율은 87.2%로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설문지 회수율은 최소 67.7%에서 최대 87.2% 사이로 추정된다.

## 1. 노동운동과의 연대 필요성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초보적인 수준이나 연대활동을 점차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는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다양한 유형의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필요성을 개별 신사회운동의 수준이 아니라 신사회운동 일반의 측면에서 개괄하여 보면 주로 사회변혁과 저항세력의 역학, 분할지배의 경계, 사회변혁에서의 국가의 역할, 전략의 상호보완성, 비용의 절감으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변혁의 저항세력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연대는 필요하다. 신사회운동은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권력의 적절한 행사, 환경의 질 보존, 여성 억압의 철폐 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운동은 어떤부문에서 어떤 사회범주들을 위한 활동을 하건, 기존의 사회질서와 사회제도들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변혁에는 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존재한다. 독과점 철폐, 금융실명제의 시행, 한국은행의 독립, 환경규제, 성차별 철폐 등의 변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국가와 독점자본이고, 이들이 보유한 강력한 정치·경제적·문화적 자원은 어떤 하나의 고립된 운동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요청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운동은 다소의 중복은 있으나 각자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동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변혁세력은 강화되고 지지기반도 확장됨으로써 국가와 자본에 대한 규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국가와 독점자본이라는 변혁 저항세력에 의한 분할지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가 필요하다. 개별 사회운동의 고립된 투쟁은 변혁 저항세력에 의하여 분할지배를 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국가와 자본이라는 저항세력이 언론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함으로써 사회운동들 간의 이질성과 이해관계의 갈등적 성격을 과장하며 사회운동들간의 분열이 조장되고 결국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들의 고립과 이데올로기적 조작은 운동의 참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특정 문제에는

변혁지향적이나 다른 문제에서는 변혁저항적이 되는 의식의 불균등 발전을 더욱 고착화시켜 사회운동들의 잠재적 기반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대는 사회운동들의 분열과 공멸을 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운동들간의 연계성에 대한 주요한 학습과 경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은 적절한 국가의 역할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화와 관료제화는 현대 사회의 정치·경제 체계들을 더욱 더 비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산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도 복잡적이며 상호연관적이어서, 어떤 한 영역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되었다. 환경파괴, 성차별, 비민주적 경제운영 등은 자본축적의 논리와 국가의 기능적 모순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자체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 영역의 문제의 해결과 복합적 문제들의 해결 고리에는 국가의 역할이 있다. 사회복지의 신장,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탄압의 중단 등은 국가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수정, 무차별적 이윤추구, 무제한적 자원착취, 환경파괴, 생산 부문에서의 성차별 등은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핵심에는 국가 정책의 변화와 국가에 의한 규제가 있으며, 이것이 사회운동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sup>2)</sup>

넷째,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전략의 차별성은 연대의 걸림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서 연대를 더욱 더 필요로 한다. 단순화시키자면,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은 동원을 통한 개혁의 정치와 언론과 홍보를 통한 영향의 정치로 전략상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차이는 각 운동들이 보유한

---

2) 국가는 한편으로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층을 비호하고 사회변혁에 저항하는 변혁 저항세력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에 반하여 제도 개혁과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구이다. 이러한 국가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운동 단체들은 국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로 상충하는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자원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연대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신 사회운동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에서 상당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국민들의 여론과 투표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에 부담을 주어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간접적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이행의 거부를 제재하는 직접적 수단에 있어 취약하다. 반면, 노동운동은 경제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적 권력 (positional power)”을 통한 직접적 제재수단을 지니고 있어, 국가에 의한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고 이행의 거부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고립된 실행행사는 언론과 국민적 지지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가 고립되어 투쟁할 경우 도리어 전략의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변혁의 현실화라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반면, 양자가 결합하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사는 직접적 제재를 활용할 수 있어 사회변혁의 현실화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다섯째,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따르는 비용의 하락은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당위론적인 차원으로부터 현실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게 되었다.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정권의 창출과정까지 소급하고 있고 국가와 독점자본을 둘러싼 비리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됨으로써 민주화의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에 더하여, 국제세계에의 편입을 위하여는 ILO나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들로부터 제기되는 노동악법을 포함함 비민주적 제법들의 개정이 요구되어 있어<sup>3)</sup> 민주화의 심화는 더욱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주화의 심화는 정권의 관용의 한계를

3)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을 보호하는 입장의 ILO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경제협력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OECD까지도 한국의 노동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수차례 걸쳐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부정, 제 3자 개입 금지 등 노동악법의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여 왔으며, 1995년 11월 23일에는 노동관계법을 ILO 권고에 상응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외에도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구속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바도 있다 (「한겨레 신문」 1995.9.17; 「주간 노동자 신문」 1996.1.5).

높일 것이며 공공적 공간의 자율성도 증대시킬 것이므로,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수반되는 국가의 탄압과 언론의 적대성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 단체들의 정치세력화가 현실화될수록 정권과 언론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신사회운동에 대한 정권과 언론의 호의 수준은 국가가 설정한 관용의 한계에 얼마나 충실한가 보다는 정치권의 역학과 민주화의 심화 정도에 의하여 더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권과 언론의 호의에 연연할 필요가 작아질 것이며, 그에 더하여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따르는 비용의 하락은 연대를 더욱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2. 노동운동과의 연대 선호도

노동운동 및 여타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택 대상으로 제시된 사회운동 단체들로서는 시민운동부문의 경실련과 참여연대, 여성운동부문의 여협과 여연, 환경운동부문의 환경운동연합과 배달 녹색연합, 노동운동부문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동)부문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제시하였다. 이들 각 단체들에게 사회단체중에서 우선적으로 연대하고 싶은 4개 단체를 선택하여 우선 순위별로 답하도록 하였다. 특정 단체의 선호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연대 우선 1순위에 선택되면 4점, 2순위에 선택되면 3점, 3순위에 선택되면 2점, 4순위에 선택되면 1점, 1-4순위에서 배제되었으면 0점을 주어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단체별 선호도로 삼았다. 이런 방법으로 각 단체의 연대선호 대상 정도를 나타내는 선호도 변수들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의 연대 선호도인 ‘노총선호도’<sup>4)</sup>나 민주노총과의 연대 선호도인 ‘민주노총선호도(MINOPREF)’ 등 특정 단체의 연대 우선순위는 0점에서 4점의 분포를 보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대상 1순위로 선택하면 4점을 갖고 어느 구성원도

---

4) 따옴표 속에 우리말로 표기된 것은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변수명이며,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연대대상 4개 단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0점을 가지며, 선호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단체들에 의하여 연대대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운동과의 선호도인 ‘노동선호도’는 한국노총에 대한 선택과 민주노총에 대한 선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0점에서 7점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표 2-1> 노동운동과의 연대 선호도.

변 수	총평균	경실련	참여	환경련	배달	여협	여연
노동선호도	1.248	0.961	2.323	0.951	0.677	0.560	2.015
노총선호도	0.173	0.181	0.091	0.163	0.104	0.482	0.014
민주노총선호도	1.075	0.780	2.233	0.789	0.573	0.077	2.001
전국연합선호도	0.921	0.707	1.315	0.852	0.686	0.241	1.725

<표 2-1>에서 보듯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동운동과의 선호도인 ‘노동선호도’의 평균 점수는 1.248을 보여 연대대상 3순위에는 미치지 못하나 4순위보다는 우선됨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인 신사회운동 단체들이 동일운동부문의 상대 단체를 우선적 연대대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운동에 대한 연대 선호도는 결코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각 신사회운동 단체들은 동일운동의 상대 단체를 연대대상 1순위로 꼽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일운동권의 단체들을 연대대상 제1순위로 지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환경운동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이 배달녹색연합을 그리고 배달녹색연합이 환경운동연합을 연대대상 제1순위로 지명하는 구성원들은 유효응답 160명 가운데 114명으로서 71.3%에 달하였다. 이런 추세에서 노동운동 단체들을 연대대상 제1순위로 지명한 응답자들이 61명으로서 유효응답의 12.6%에 달한다는 것은 노동운동이 신사회운동 구성원들로부터 연대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선호하는 정도는 신사회운동들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선호도’의 점수가 시민운동단체 구성원들의 경우 1.64이고 여성운동의 경우 1.29로서 ‘노동선호도’의 전체 평균 점수인 1.248을 상회하는 반면, 환경운동의 경우 ‘노동선호도’의 평균점수가 0.814로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노동운동과의 연대 선호도에서 보이는 운동간의 차별성은 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보고서(조돈문 1996b)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데 반하여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경우 연대활동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라고 하겠다. 환경운동 내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노동선호도’가 0.951로서 배달녹색연합의 0.67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환경운동내 단체간의 편차는 배달녹색연합에 비하여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그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이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 출발 하였으며 노동운동과의 연대투쟁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역사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 3. 노동운동과의 연대 평가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하여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문항의 질문을 하였다. 첫째 질문은 “노동조합들과의 연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는 다음 중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노동조합들과 연대함으로써 운동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는 +1점, 노동조합이 좌경 세력이라거나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정부의 탄압을 불러올 것이라는 응답의 경우는 -1점, 기타 중립적인 응답에 대하여는 0점을 주어, ‘노동연대평가’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따라서 ‘노동연대평가’의 점수는 -1점에서 1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노동운동과의 연대로 소속 신사회운동이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의미하고 -1점에 가까울수록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소속 신사회운동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로부터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하여 얻는 것이 많으면 +1점, 잃는 것이 많으면 -1점을 주어 ‘노동연대득실’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표 2-2〉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평가.

변 수	총평균	경실련	참여연	환경연	배달	여협	여연
노동연대평가	0.656	0.532	0.796	0.713	0.592	0.384	0.918
노동연대득실	0.438	0.156	0.681	0.366	0.389	0.218	0.819

〈표 2-2〉에서 보듯이, ‘노동연대평가’의 경우 시민운동은 평균 0.659, 여성운동은 0.651, 환경운동은 0.653으로서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소속 신사회운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운동들간에도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의 경우, 노동운동과의 연대 활동이 매우 부진하고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선호도가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에 비하여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구성원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의 정도에 있어서는 여타 신사회운동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기초가 될 것이다. ‘노동연대득실’에 있어서 여성운동의 평균이 0.519로서 가장 높고, 시민운동이 그 뒤를 이어 0.419, 환경운동이 0.378로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로부터 얻는 것이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간의 공통의 활동 목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환경운동이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비하여 ‘노동연대득실’의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1점에서 +1점 사이의 분포에서 0.378이라는 점수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노동운동과의 연대로부터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대평가’와 ‘노동연대득실’의 총평균 점수는 각각 0.656과 0.438로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신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로부터 해당 운동의 발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배척하지 않고 선호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환경운동의 구성원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뒤지지 않음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의 연대활동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4. 노동운동과의 연대 필요성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혁 추구성향과 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 1) 사회단체의 변혁 지향성

“사회단체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5개의 응답지 가운데 “사회변혁을 추구해야 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58.4%에 해당하여 신사회운동의 목표는 사회변혁의 추구임을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의 과반수가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약자의 편에 서서 활동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4.1%를 차지하고 있어 기득권 유지를 축으로 하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양자를 합할 경우 72.5%로서 “강력한 압력단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를 포함할 여타의 3개 응답지들에 대한 응답율의 세 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에 있어서는 단체들간에 별다른 차별성 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은 소속 단체들이 “강력한 압력단체” 이상으로 사회변혁과 약자들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변혁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변혁과 약자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는 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대표적인 저항세력은 자본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2) 개혁정책 평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개혁이 심했다는 응답에는 -1

점, 개혁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에는 +1점, 개혁이 알맞았다는 응답에는 0점을 주어 ‘개혁평가’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개혁평가’는 -1점에서 +1점 사이의 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의미한다.

<표 2-3> 정부의 정책 평가.

변 수	총평균	경실련	참여	환경련	배달	여협	여연
개 혁 평 가	0.772	0.795	0.893	0.754	0.789	0.427	0.976
노 동 정 책	0.545	0.482	0.831	0.410	0.611	0.031	0.905
노 사 관 계	0.600	0.614	0.805	0.491	0.706	0.097	0.885

<표 2-3>에서 보듯이 신사회운동단체들의 ‘개혁평가’ 평균 점수는 0.772로서 김영삼 정부에 의한 개혁정책의 수행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표명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의 평가에 있어 신사회운동단체들 사이에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협만은 0.427로서 평균 점수를 훨씬 밑돌고 있어 여협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이 강하나 여타 신사회운동단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영삼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하여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신사회운동이 국가를 사회변혁의 동반자로서 보다는 사회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노동정책의 평가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의 정부의 개혁정책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도 매우 비판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두 가지 문항을 물어보았다. 첫 번째 문항인 김영삼 정부가 펼치는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에는 -1점을

주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에는 +1점을 주어 ‘노동정책’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노동정책’은 -1점과 +1점 사이의 범위를 지니며 +1점에 가까울수록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 ‘노동정책’의 평균 점수는 0.545로서 김영삼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항은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기업편만을 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동의한다는 응답에는 +1점을 반대한다는 응답에는 -1점을 주어 ‘노사관계’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노사관계’는 -1점과 +1점 사이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한다는 평가이며, ‘노사관계’의 평균 점수는 0.600로 나타나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친자본적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련된 두 변수인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서는 단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두 변수들에서 보이는 사회운동 단체들간의 점수 편차는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여협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모두에서 평균 점수를 훨씬 밑도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단체는 여연과 참여연대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연의 경우, 노동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민우회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경우는 비록 출범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니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세력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만큼 친노동자적이고 진보적 성향이라는 단체의 지향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전체 평균점수가 0.545와 0.600으로서 비슷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이며, 그 이유는 정부가 균형된 노동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으며 친자본적으로 편파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노동문제에 관한 한 국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국가는 자

본과 결탁하여 계속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판단이며, 국가와 자본을 사회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의 연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자본이라는 사회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의 연합에 대항하여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는 노동문제 자체의 해결부문에서도 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4) 자본에 대한 평가

자본에 대한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의 평가를 묻기 위하여 세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기업체란 노동자와 소비자를 희생시켜 돈을 번다”는 견해, “오늘날 한국 재벌들은 지나치게 힘이 세다”는 견해와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주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반대하는지 찬성 혹은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반대하는 응답은 -1점, 찬성 혹은 동의하는 응답은 +1점을 주어 각각 ‘자본이기주의’, ‘재벌패권’, ‘재벌규제’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들 변수들은 +1점에 가까울수록 자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반면 -1점에 가까울수록 친자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4> 자본에 대한 평가.

변 수	총평균	경실련	참여	환경련	배달	여협	여연
자본이기주의	0.377	0.154	0.576	0.407	0.389	-0.065	0.804
재벌패권	0.912	0.920	0.897	0.918	0.878	0.932	
재벌규제	0.926	0.947	0.913	0.908	0.848	0.986	

<표 2-4>에서 보듯이, ‘자본이기주의’의 평균은 0.377점으로서 기업이 공익에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집단으로 평가하여 자본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재벌의 경우에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 ‘재벌패권’과 ‘재벌규제’에 대한 평균은 각각 0.912와 0.926로서 유사한 수준에서 높은 값을 지니고 있어 ‘자본이기주의’

의 평균 점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비교적 동정적 시각도 포함하고 있으나 대기업인 재벌들에 대하여는 극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이기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여협과 경실련도 ‘재벌폐권’과 ‘재벌규제’에서는 다른 신사회운동 단체들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재벌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사회운동 단체 전반에서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노동문제 현안들에 대한 시각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자본, 특히 독점자본인 재벌들에 대하여 극도의 적대감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희생자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민주주의, 노동자, 여성, 환경, 사회복지, 경제정의 등 6 부문들 가운데,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사회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최고의 희생자로서 지목된 것은 노동자로서 유효 응답자 514명 가운데 190명으로 37.0%에 달하였다. 노동자 다음으로 크게 희생을 치른부문으로서는 24.5%의 지목을 받은 환경과 23.2%의 지목을 받은 민주주의였다. 환경이나 민주주의보다도 노동자들이 훨씬더 큰 희생을 치른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정부, 자본과 언론이 유포하는 노동자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 되는 것으로서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이 이 이미지가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산물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자로서의 노동자와 집단이기주의 주체로서의 자본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의 조합은 신사회운동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 노동측에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2-5>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시각.

변 수	총평균	경실련	참여연	환경연	배달	여협	여연
노조정치인정	0.408	0.408	0.774	0.394	0.237	-0.177	0.811
민주노총합법화	0.693	0.618	0.936	0.713	0.620	0.381	0.892



이러한 노동자들에 시각에 더하여 노동문제 현안들에 대한 질문도 두가지를 포함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인정”과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은 +1점, 반대하는 응답에는 -1점을 주어 ‘노조정치(V39N)’와 ‘민주노총합법화(V39F)’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표 2-5>에서 보듯이, ‘노조정치’와 ‘민주노총합법화’에 관하여 단체들간에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나, ‘노조정치’의 평균 점수는 0.408로서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민주노총합법화’의 평균 점수는 0.693으로서 노동조합 정치활동 지지수준 이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운동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 노동문제 현안들에 대하여 신사회운동은 압도적으로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 합법화에 대한 높은 지지수준은 노동조합 정치활동 지지수준보다도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일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이 이러한 기초에 더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 5.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과의 연대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사회운동의 목표는 사회변혁이며, 사회변혁을 위하여는 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여타 운동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국가와 자본의 연합이라는 사회변혁의 저항세력에 대항하여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실현을 위하여 연대하는 저항세력 대 변혁세력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은 사회변혁을 운동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위치시키고 있어 사회변혁에 저항하는 저항세력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신사회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저항세력은 국가와 자본임이 확인되었다. 신사회운동은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개혁의지를 보이는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하여도 개혁의 미흡함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사문제 개입이 지나치게 친자본적으로 편파적이라

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신사회운동 단체 구성원들은 자본을 이기주의집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벌에 대하여는 극단적인 적대감을 공유하고 있어, 친자본적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국가와 자본의 연합을 인식하고 양자의 연합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사회변혁의 저항세력인 동시에 사회변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양면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제도개혁을 통한 사회변혁 주체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는 국가에 대한 압력과 공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 구성원들은 국가에 대한 양면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이미 불신의 단계를 넘어서 적대적 성격마저 지니게 됨으로써, 극도의 적대감의 대상인 자본과 더불어 국가는 변혁 저항세력으로서 신사회운동의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사회운동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자본에 대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경제성장의 최대의 희생자라는 우호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운동이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는 친노동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스스로도 발전하고 연대를 통하여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국가와 자본이라는 저항세력에 대항하여 신사회운동은 사회변혁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국가와 자본이라는 저항세력의 연합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연대하여 대처하는 대결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신사회운동의 현재의 활동 수준을 훨씬 앞지름으로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은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겠다.

## 제 3 장

###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 : 연대경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경실련은 1989년 7월 8일 출범하였으며 참여연대는 그보다 훨씬 늦은 1994년 9월 10일 창립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하겠다. 하지만 시민운동의 짧은 역사에 비하여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매우 활발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주로 정치부문, 경제부문, 노동운동 지원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의 특성은 연대의 활성화와부문간 균등발전이라 하겠다. 복지제도 개선을 포함한 경제제도의 개혁 부문과 정치제도의 개혁 부문에서는 연대활동이 비교적 일찍부터 활성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노동운동의 지원 부문에서의 연대활동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으나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은부문별 균등발전의 양상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노동운동 지원 부문 등 각부문에서의 연대활동의 전개를 먼저 분석하며, 이러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의 활성화와 균등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

5절과 제6절에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의 현 수준 발전정도와 연대의 특성에 맞는 연대활동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고찰한다. 제5절에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제6절에서는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자세와 역할에 관하여 논의한다.

## 1. 정치부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정치 부문에서 펼친 연대활동은 주로 선거와 관련된 활동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이었다.

### 1) 선거 관련 연대활동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선거와 관련하여 전개한 연대활동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감시하는 활동,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후보지원 활동, 그리고 노동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쟁점화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가장 먼저 연대활동을 펼친 것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겠다.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경실련과 한국노총이 주도하여 8개 단체들로 1991년 2월 7일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이하 공선협)을 결성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sup>5)</sup> 이렇게 시작된 공선협의 활동은 현재까지도 참여 단체들의 구성은 변모하더라도 여전히 경실련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포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선협이 강화되고 역사적 중요성을 갖게 된 계기는 1992년 14대 총선을 치른 다음 11월부터 본격화된 14대 대선 관련 활동을 전개하면서 부터였다.

5) 공선협의 발족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2:506-513)을 참조할 것.

14대 대선에 앞서 공선협의 조직은 대폭적으로 확대·강화되었으며, 이 때 전국 본부의 집행위원 단체로 참여한 단체들만 하여도 42개 단체에 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2개 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지역협의회는 단순히 공선협 전국 본부의 하부 기구로서 지역적 기반이 없는 기구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내의 사회단체들을 포괄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공선협 서울지역협의회는 서울 지역의 53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부산지역협의회는 57개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지니게 된 공선협은 14대 대선을 불법적이고 부패한 선거운동이나 지역주의로부터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기부나 행정관청 등 관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고질화된 군부재자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TV토론 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의에 의한 대결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대결로 선거풍토를 혁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sup>6)</sup>

1992년 공선협의 강화된 조직과 성공적인 활동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상당 수준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화된 공선협이 모체가 되어 정치제도 개혁과 경제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야기함으로써 한국노총과 경실련을 중심으로하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정착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노총측이 공선협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운동과의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는 반면, 전노협 측은 가입 단체인 전국연합을 통하여 노동자 후보 및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선거전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펼쳤다.<sup>7)</sup> 이러한 선거전에서의 시민운동과의 연대는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국연합의 지원 후보 선정 작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주로

6) 공선협의 구성과 1992년의 활동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3: 492-493, 507-522)와 경실련(1993: 196-249)을 참조할 것.

7) 한국노총도 노동자 후보를 지명하여 당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업이었으며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전개한 활동은 아니었다. 또한 한국노총의 경우 노동자 후보의 당선 보다는 공선협을 통한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전국연합이 결정한 전략과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4대 대선의 경우 '전국노동자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거 관련 선전·홍보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전노협의 활동은 주로 전국연합과 민주당의 정치협상의 틀 내에서 전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전노협과 민민운동과의 연대활동은 1994년 지자체 선거의 경우에도 지속되었다. 당시의 선거 대응은 전노협 보다는 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이하 민노준)의 수준에서 수행되었으며 여전히 전국연합 차원의 제한적 독자후보 방침을 수용하여 전개되었으나 1992년의 경우에 비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8)</sup>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선거대응 전략은 한국노총이 공선협을 통하여 전개한 공명선거 감시활동과 전노협이 전국연합과의 연대하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선거개입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3의 선거대응 전략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 형식으로 전개되었는 바, 그것은 정당과 후보들의 노동관련 정책들을 비교하여 쟁점화 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노동관련 정책 쟁점화는 주로 경실련이 주도하였으며, 경실련은 선거를 정책대립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수립을 담보하는 정책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1992년 14대 대선 당시 노동정책의 비교 평가와 쟁점화를 위하여 경실련 노동조합의회를 중심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정책캠페인을 설명함으로써 각 정당과 후보의 노동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상의 차별성을 홍보하는 사업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1월 서울, 안산, 수원, 인천 지역 등에서 노동조합 지도자 초청 정책캠페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경실련은 대선에서 경쟁하는 3대 후보들을 중심으로 정당과 후보의 공약들 가운데 노동관련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12월 11일에서는 구로지역에서 산돌노동문화원과 공동으로, 12월 14일에서는 현충원과 공동으

8) 전노협과 민노준이 전국연합을 통하여 선거전에 적극 개입하는 노동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노협(1993:111-125; 1995:195-202)을 참조할 것.

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3당 노동공약 비교 평가 토론회는 경실련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전자의 노동조합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 비하여 훨씬 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경실련이 주도한 연대활동이었다고 하겠다.<sup>9)</sup>

이상에서 살펴본 선거와 관련한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은 한국노총과 경실련, 전노협과 전국연합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어 시민운동과 민민운동이 함께 노동운동과 연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199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연합 등이 총선에 공동 대응하여 정책연대를 펼치기로 결정함으로써,<sup>10)</sup> 선거에 임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민민운동까지 포괄하는 일대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 2)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1991년 결성된 공선협은 1992년 14대 대선을 거치면서 조직과 활동역량에서 급격한 발전을 하였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발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공선협의 핵심이었던 경실련과 한국노총은 공선협 참여단체들을 중심으로 1993년 1월 28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정사협)'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다음, 5월 27일에는 42개 단체들을 포괄하여 정사협을 정식 출범시키게 된다. 이렇게 공선협의 연장선상에서 구성된 정사협은 한국노총과 경실련을 중심으로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정사협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은 부정부패의 척결, 국회의 활성화, 재산공개 비리의혹 진

9) 경실련의 노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수행된 노동관련 정책 설명회 및 토론회들에 관하여는 경실련(1993: 37-41, 287-293)을 참조할 것.

10) 총선과 관련한 노동운동-시민운동-민민운동의 간담회에 관하여는 「주간 노동자신문」(1996.1.26)을 참조할 것.

상조사, 효과적인 개혁 수행을 위한 개혁입법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선협에서 발전된 정사협은 정치제도의 개혁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쌀 지키기 운동과 경제개혁 촉구운동 등 경제 부문의 사업들에 대한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공선협에서 비롯된 한국노총과 경실련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은 공명선거 풍토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하여, 정치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경제 부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경실련과 더불어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한 반면, 전노협은 1990년 1월 22일 결성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에 대항하여 주로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3당 합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여대야소로 전환시킴으로써 노태우 정권의 반민중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전노협은 전국농민단체연합(이하 전농), 전국국민단체연합(이하 전빈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교조) 등과 함께 “민자당일당독재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노태우 정권과 정면 대립하게 되었다. 전노협은 국민연합을 통하여 민민운동과 연대하여 2월에는 3당야합의 반민중성을 규탄하는 ‘반민주야합 분쇄 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9일에는 민자당 해체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자당 창당 규탄투쟁’을 전개하였고, 5월 18-20일에는 광주항쟁의 학살주범을 처단하고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항쟁 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6월 9-10일에는 6.10 민주항쟁을 계승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전노협은 민민운동과 연대하여 전노협을 탄압하는 노태우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sup>11)</sup>

## 2. 경제부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경제 부문에서 연대하여 전개한 활동은 경제제도 개혁, 사회복지의 확충, 쌀시장개방 반대의 세 부분으로 대별될 수 있다.

11) 전노협이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민민운동과 연대하여 전개하는 정권퇴진 운동에 대하여는 전노협(1991: 36-38, 319-330)을 참조할 것.



## 1) 경제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경제제도 개혁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연대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사례는 경제개혁 촉구 범국민대책위의 활동과 한국은행 독립운동을 들 수 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족된 단체인 만큼 어느 다른 단체들보다도 경제제도의 개혁에 관심이 큰 단체이다. 경실련은 이미 1991년 11월 7일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공추련 등 15개 단체들과 함께 ‘경제개혁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으나 일회적 행사로 끝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었다.<sup>12)</sup> 여기에 공선협의 성공적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정사협은 경실련으로서는 좋은 발판으로 작용하여, 경실련은 1993년 4월 30일 한국노총과 함께 경제개혁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 다음, 5월 22일에는 23개 단체들을 포괄하여 ‘경제개혁 촉구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경제개혁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불로소득을 척결하고 공정시장 경쟁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치 경제를 탈피할 것,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할 것,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 근로 소득자에게 불리하고 불로 소득자에게 유리한 조세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인 인하조치를 취할 것, 자유경쟁을 해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벌의 소유분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산업민주주의를 보장할 것, 고용보험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sup>13)</sup> 이처럼 공선협에서 출발한 한국노총과 경실련 중심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정사협의 정치제도 개혁 추구운동에 이어 경제제도 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일상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

12) 경제개혁 촉구 시민대회에 관하여는 경실련(1993: 334-340)을 참조할 것.

13) 경제제도 개혁을 위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관하여는 경실련(1994: 63-66)과 한국노총(1994: 422-430)을 참조할 것.

으나 공선험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정도나 운동의 결과가 훨씬 뒤떨어진다고 하겠다.

경제개혁 촉구 범국민대책회의에서도 요구된 바 있지만, 한국은행 독립은 경실련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경실련은 이미 1992년 11월 한국은행 노동조합 등 14개 금융산업 노동조합들과 함께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 금리자유화, 금융인사권의 독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공청회는 경실련과 금융산업 노동조합들이 공동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금융노련)이 후원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을 위하여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잘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한국은행의 독립은 경제개혁 촉구 범국민대책회의 이후에도 다시 제기되어, 1994년 4월에는 금융노련 소속의 한국은행 노조와 통일시대민주주의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주도하여 한국노총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공동참여 하였을 뿐만아니라, 금융노련과 사무금융노련도 참여하고, 전국연합도 참여함으로써<sup>15)</sup> 한국은행 독립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민운동 뿐만아니라 민민운동도 포괄하여 노동운동이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 2)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대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경제개혁 촉구 범국민대책회의에서도 의료보험과 택아를 포함하는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나, 그 경우에는 한국노총과 경실련이 연대하여 벌인 활동이었다. 뒤늦게 출범한 참여

14) 경실련과 금융계 노조들이 주최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경실련(1993: 38-39)을 참조할 것.

15)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노동운동과 민민운동과의 결합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5: 444-447), 오영식(1994: 24-28), 이목희(1994: 19-23), 국민회의(1994: 53-54)를 참조할 것.

연대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고용보장 및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전노협, 전노대, 민주노총이 전개하는 사회개혁 투쟁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상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1995년 4월 21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노준이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연대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sup>16)</sup> 참여연대는 앞으로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들의 개선을 위하여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활동할 것을 밝히고 있다.<sup>17)</sup>

### 3) 쌀시장개방 반대를 위한 연대

경실련은 1990년 10월부터 이미 UR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하여 농업을 보호·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은 농업문제를 포함한 시장개방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농업문제와 관련하여는 쌀시장 개방 반대와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경실련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연대활동으로 발전한 것은 1993년 3월 22일 한국노총과 함께 166개 단체를 포괄하는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면서 부터였다. 대책회의에는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연합이 참여함으로써 한국노총과 전노협을 포괄하는 노동운동과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연대가 범국민적 조직운동 속에서 형성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부터 UR 농산물 협상이 급진전되고 12월 초 김영삼 정부는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 개방불가 입장을 포기하자, 경실련은 12월 15일로 임박한 최종 개방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12월 3일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발족시켰다. 범대위로

16)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과 민노준과 공동주최한 연금제도개혁 토론회에 관하여는 참여연대(1995), 참여사회(1995.5/6: 77)를 참조할 것.

17) 이대훈(1996)을 참조할 것.

결집된 연대활동은 정부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월 7일과 1994년 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4년 3월 10일에는 범대위의 조직을 더욱 확대하여 194 단체들로 '우리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으며,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경실련, 한국노총, 전국연합 외에도 전노대까지 독립적인 단체로 참여하여 전노대 의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고문직을 맡아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우리쌀 지키기를 위한 노동운동, 시민운동, 민민운동간의 연대가 범국민적 활동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연대에 기초한 범국민운동본부는 UR의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쌀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전개하였다.<sup>18)</sup> 우리쌀 지키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전개한 어떤 다른 연대활동보다도 더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성공적인 연대활동이었다고 하겠다.

### 3. 노동운동 지원부문

노동운동과 여타 사회운동과의 연대는 비단 정치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전개된 연대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악법과 정부에 의한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서 여타의 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여타의 사회운동들과의 연대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연대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노동운동의 지원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나, 주로 전노협과 그 후속 조직체들(전노대, 민노준,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이 핵심을 이룬다.

18) UR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정책에 대항하여 전개된 우리쌀 지키기 운동의 발전 과정과 노동운동, 시민운동, 민민운동 간의 연대활동에 관하여는 경실련(1994: 243-251; 1993: 320-331), 한국노총(1994: 448-451; 1995: 431-436), 전국연합(1994: 37-38)을 참조할 것.

## 1) 민민운동과의 연대

전노협은 출범 이전부터 정부에 의하여 극심한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정부에 의한 전노협과 그 후속 조직체들의 합법성 부인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전노협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권퇴진 운동으로 정면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노협의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지원한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민민운동권이었다. 전노협은 정부의 탄압에 대하여 조직을 보전하고 나아가서 노동약법을 개정하고 군사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층 민중들의 조직들과 더불어 1990년에는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뒤이어 1992년에는 전국연합을 구성하여 이러한 민민운동단체들의 핵심 세력을 구성하게 되었다.<sup>19)</sup>

군사독재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하에 놓인 전노협과 소속단체들을 지원한 것은 국민연합과 전국연합 및 그 소속단체들로서,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노동운동 탄압저지 및 노동약법 개정을 위한 노동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전노협 결성을 전후한 시기의 집중적 탄압에 대응하여 국민연합의 결성 이전에 이미 ‘전노협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전노협 관련 사업장들에 대한 업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를 향의 방문하고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선전물 배포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곧이어 결성된 국민연합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KBS와 현대중공업(이하 현중)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위시한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대응하여 ‘노동운동탄압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탄압받는 노동조합들을 지원하였으며, 뒤이어 언론관련단체 등을 포괄하여 ‘KBS 현중 노조탄압 분쇄 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언론민주화를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를 향의 방문하는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전노협과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은 1991년 전노협의 핵심 사업인 노동법개정 투쟁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

19) 전노협이 국민연합과 전국연합을 결성하여 민민운동과 연대하여 군사독재 정권과 정면 대항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에서 다룬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부분을 참조할 것.

한 전노협에 대한 국민연합의 지원활동은 이후 국민연합이 전국연합으로 확대 개편되고 전노협이 민주노총으로 발전하면서도 지속됨으로써 전노협의 지원을 중심으로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은 더욱 더 공고하게 되었다.<sup>20)</sup>

## 2) 시민운동과의 연대

비노총 계열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국민연합과 전국연합과 같은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안,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은 1992년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MBC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활동과 중재활동을 전개하고, 서울택시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회사측에 의한 매수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임금협상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sup>21)</sup> 하지만 이러한 경실련의 활동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해결을 위한 개입으로서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연대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경실련이 한국노총과는 공선협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사협을 통한 정치제도의 개혁, 경제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등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전노협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에는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노협과 같은 진보적 노동운동에 대한 경실련의 사회적 거리가 단축되고 연대활동의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은 민주노총의 결성을 전후한 시기였다. 1995년 11월 7일 진념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은 사회개혁에 비중을 두고... 정강정책에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궤를 벗어난 내용이 많다”(「주간 노

20) 전노협 결성 전후부터 시작된 국민연합과 전국연합의 지원활동으로 구축되어가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관하여는 전노협(1991: 333-338; 1992: 91-123)과 전국연합(1992: 120-133; 1995: 93-98)을 참조할 것.

21) 경실련(1993: 39-41)을 참조할 것.

동자신문」1995.11.9)는 이유를 들어 결성을 앞둔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노동운동이 작업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때는 노동운동을 조직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노동운동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를 포함한 범국민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펴고자 하면 노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으로 규정하여 탄압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자들의 단체활동을 불법화하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만큼, 작업장 안팎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여 문민정부와 개혁을 운운하면서도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참여연대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장관의 발언은 사회복지, 교육, 주거, 등 제반 사회문제가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주간 노동자신문」1995.11.9)이라며 즉각 반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항하여, 경실련, 여연,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등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제조약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국내법의 규정을 들어 민주노총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 최고 지도자들을 구속 수배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헌납하고... 노동자를 억압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구시대적 노동통제방식을 버리라”(「주간 노동자신문」1995.11.17)고 반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처럼 시민운동 단체들이 전노협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비노총 계열 진보적 노동운동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나선 것은 정부와 자본측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실련이 정치자금 모금창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경유착과 공정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대하여 해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22)</sup>

#### 4. 연대의 활성화와 균등발전

노동자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심화, 경제제도의 개혁, 사회복지의 증진 등 시민운동의 운동목표와 이해관계를 같이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시민운동은 1995년 민주노총의 출범을 전후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노동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간의 연대활동은 더욱 더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 1) 목표의 공유

경실련의 경우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정의 실현을 목표로 1989년 출범하였다. 경실련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① 빈곤타파를 위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 ② 비생산적 불로소득의 척결, ③ 경제적 기회균등, ④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의 결함 시정, ⑤ 금권정치 및 정경유착의 척결, ⑥ 토지의 재산증식 수단화 금지”(서경석 1992)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설정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뒤늦게 1994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와 인권 및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 각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체입법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참여연대 1995) 등을 구체적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창립목표에 있어서 경실련은 경제 부문에 참여연대는 정치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하고 있으

---

22) 경실련의 전경련 해산운동에 관하여는 「한겨레 신문」(1995.11.11)과 「주간 노동자신문」(1995.11.17)을 참조할 것.



나, 양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전개한 사업들은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 경제정의의 실현과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표방한 목표 상에서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적 활동 영역은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들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활동에 노동운동이 결합하는 형태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심화는 사회 제 부문의 민주화로서 군사독재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민 모두의 염원인 동시에, 노동운동의 자유로운 활동이 노동악법들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부문이다. 경제정의의 실현과 경제체도의 개혁은 비자금을 통하여 형성된 정경유착의 근절, 정권의 비호하에 통제불가능한 수준까지 달하게 된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은 자본의 무제한적 권력행사에 대항하여 자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불공정 경쟁을 퇴치한다는 점에서,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운동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의 증진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 부분의 증대를 확보함으로써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물적 생존의 기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 2) 연대의 균등발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있어 정치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의 연대는 일찍 시작되어 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정치 부문의 경우 연대활동은 선거관련 활동과 정치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경제 부문의 경우 복지제도를 포함한 경제제도 개혁, 한국은행(이하 한은) 독립, 쌀시장 개방반대 등에 있어 시민운동 못지 않게 노동운동도 큰 관심을 보임으로써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

대는 주로 시민운동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정치제도 개혁이나 경제정의 확립 등의 영역이 시민운동의 핵심적 활동 대상이므로 시민운동이 그동안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고 상당한 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였으므로 시민운동의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반면 노동운동 지원부문의 경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정치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의 연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뒤늦게 시작되었다. 노동운동 지원의 핵심은 전노협 등 민주노조 진영에 대한 탄압과 노동약법의 유지에 저항하여 노동운동을 방어하는 연대활동으로서, 이부문에서 전노협의 출범전후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지원에 나선 것은 국민연합과 같은 민민운동권이었다. 전노협에 대한 정부의 원초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은 전노협이 군사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었는데, 전노협이 국민연합의 소속단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전노협과 국민연합은 국가와 정면대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전노협 등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민민운동 등 비노동 세력들의 지원이 정권퇴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경실련 등 시민운동은 민주노조 운동의 지원에 선뜻 나설 수 없었다.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 지원과 정권퇴진 운동의 등식이 붕괴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들과는 달리 정권의 창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정치군인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형식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리척결과 정치인 사정작업과 병행하여 개혁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김영삼 정권의 군사독재 정권과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국민연합이나 전국연합과 같은 민민운동권도 정권퇴진 운동으로부터 제도개혁으로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주노조 세력들도 정권퇴진으로부터 조직보전과 노동약법 개정에 주력하게 되었다. 김영삼정권의 출범에 따른 이러한 민주노조운동과 민민운동의 운동 목표의 변화는 경실련을 포함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약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운동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 지원부문에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특히 민주노총의 출범을 전후하여 활성화되었으며, 비록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경실련이 전경련 해체운동을 전개하고 참여연대가 민주노총과의 다방면의 연대활동을 모색·추진함으로써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운동 지원에 시민운동이 참여하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연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유형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간의 기존의 연대활동은 한편에서는 경실련과 한국노총이 결합한 유형으로 이들은 공선협, 정사협, 경제제도개혁 촉구 범국민대책회의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반면, 전노협 등 민주노조 세력들은 경실련과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연대활동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단체인 국민연합과 전국연합 등의 민민운동과 결합하여 정권퇴진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운동이 노동운동 지원에 가세하여 전노협과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 진영과 연대함으로써, 이제 시민운동은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하던 연대 유형으로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노동운동 전체와의 연대활동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노동운동 내적 연대와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으나,<sup>23)</sup>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유형은 크게 변모하였으며 향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내용과 역량에 있어 커다란 발전적 변화가 전망된다.

### 3) 연대발전의 문제점 및 가능성

참여연대는 발족 당시부터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경실련도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운동 등 여타운동과의 연대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게 됨으로써,<sup>24)</sup>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을 포함한 제 사회운동들과의 적극적 연대전

23) 신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분열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략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과의 연대는 더욱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공통의 관심사는 정치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부터 연대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점차 더욱 활성화되어 갔으며 ‘우리쌀 지키기 운동’의 경우 절정을 이루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김영삼 정권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노협 등 민주노조 세력들이 정권퇴진운동으로부터 후퇴하여 노동법개정 등 제도개혁 수준으로 투쟁의 수위를 낮추고, 그에 따라 정권과의 극한 대립양상이 조직보전 차원 이외의 영역을 중심으로 투쟁의 양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전략들을 채택하게 된 것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합법적 공간에서의 운동을 통한 점진적 제도개혁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경실련 등 시민운동 단체들이 민주노조 세력과의 연대에 보다 적극성을 떨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민주노총의 출범을 전후하여 참여연대 등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운동이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악법

24)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은 발족된지 1년 이내에 노동문제에 관한 사업들을 수차례 벌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출범을 전후하여 더욱 활성화되었음은 앞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실련의 경우 2주년 사업을 평가하며 3차 년도의 핵심적인 사업방향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연대활동으로 지적하면서 사회변혁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경실련> 혼자 힘만으로는 그 엄청난 경제개혁의 과제가 실현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대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교계, 노동계, 학생청년 등 각계와의 폭넓은 연대를 강화하여 기필코 우리사회의 개혁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경실련 1991: 14-17).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은 3주년 평가에서도 “시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종교운동간의 범국민적 연대가 절실하게 되었다”(서경석 1993:14-20)며 연대활동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앞 장에서 보았듯이 점차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활동의 발전 추세는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동)과도 사안별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서경석 1995: 15-20), 12.12대응의 경우 통일시대민주주의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가족실천협의회 등 민민운동 단체들과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실련 1995).

의 철폐를 주창하며 민주노총을 지원하면서 더욱 공고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날로 활성화되어 가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에 시민운동이 참여하지 못한 점, 시민운동에서 시작된 전경련해산 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 전노대와 민주노총측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투쟁이 아직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점들은 있다. 하지만 사회개혁 투쟁의 경우 연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민주노조 진영이 정부에 의하여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과 그 활동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였다는 점들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출범을 전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공동 활동이 토론회 등의 공동 개최로 시작되고 있고, 시민운동이 정부에 의한 사회개혁 투쟁의 탄압을 규탄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회개혁 투쟁의 내용들과 관련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은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겠다. 더욱이 1995년 11월 2일에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주관하여 “한국사회 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적 관심 :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향하여”라는 필자의 발제를 포함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운동을 포함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1996년 2월 6일에는 “19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민운동 등이 참여하여 연대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워크숍을 연 바 있다. 이러한 진전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14대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이 주도하여 각 정당 및 후보들의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책과 공약의 비교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이러한 노동정책을 포함한 정당간의 정책대립 유도의 노력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1996년 1월 18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민민운동 단체들도 포함하여 총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어 정당들과 후보자들간의 정책대립을 유도하고 노동정책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5.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로서는 총선 등 선거관련 대책활동과 재벌규제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1) 총선 관련 활동

총선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의 투표행태<sup>25)</sup>가 극복되고 정당들과 후보자들 간의 정책대결로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역할거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민주당의 분당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총선은 지역 봉당들의 더러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 봉당들의 거세를 위하여는 집요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당들과 후보자들의부분별 정강 및 공약의 비교, 후보 초청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후보들간의 정책 차별성 및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의 활동에서 보여주듯이 14대 총선을 겨냥하여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교대로 초청하여 정책캠페인을 설명하고, 노동조합 등 노동운동권과 연대하여 노동문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과 같은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통한 노동문제 관련 정책 토론회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노동자들의 밀집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대결의 유도 및 정책 토론회의 개최는 정사협과 같이 정치제도개선을 위한 백과사전식의 목록을

---

25)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출신 지역인 한편, 출신 지역 다음으로 개인의 이념적 성향(진보-보수)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이념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별로 선호 정당에 있어서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행태, 지역연고와 이념적 성향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조돈문(1996a)의 분석을 참조할 것.

작성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방식보다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

## 2) 전경련 해체 운동

재벌의 횡포를 규제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재벌들의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전경련 해체운동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경련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부정축재 혐의를 지닌 재벌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이후 군사정권에 대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의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을 자본가들 중심으로, 특히 독점자본인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보호·신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비자금 사건을 통하여 노출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은 전경련을 주도하는 대재벌들을 총망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과 독점자본들의 특혜 보전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의 악화와 빈번한 도산은 생존하는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까지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전경련을 해체하기 위하여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도 가세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3) 기타의 영역들

경제제도의 개혁부문에서는 한은독립의 문제, 세계개혁 문제, 차명계좌의 금지를 통한 금융실명제의 심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하여 있다. 또한 노동운동 지원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국가와 자본은 무노동무임금의 재구축, 근로자파견법제정 기도, 시간제 노동자 합법화 문제, 노조 전임자 축소 기도, 민주노총의 합법성 및 사회개혁투쟁의 합법성 부정, 노동조합 지

도자들의 구속과 수배 등 노동운동 탄압이 여전히 주요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러한부문에서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산발적인 연대활동 보다는 몇 가지 핵심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활동이 연대활동의 조직 및 전개뿐만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도 효과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등 제반 신사회운동들과 연대해야할 사안들에 대하여는 제7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인 바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 6. 연대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자세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위하여는 시민운동 못지 않게 노동운동도 연대의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심화, 경제정의의 확립, 사회복지의 증진 등부문에서의 연대활동은 시민운동이 주도하여 왔으며 시민운동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악법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시민운동은 여타의 사회운동과 더불어 노동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운동은 시민운동과의 연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입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노동운동도 시민운동의 노동운동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관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에 요청하는 연대 동반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sup>26)</sup>

첫째, 노동운동의 관심의 확대가 요청된다. 노동운동은 물적 자원의 분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적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도 주요한 수혜자가 되는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관해서조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짐에 있어 미흡하다. 노동운동은 관심을 확대하여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

---

26) 이 부분은 주로 시민운동 관계자들과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자가 정리·보완한 것이다.



로서 또한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세력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 자신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 영역을 넘어서 영역에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노동운동 조직들(단위 노동조합, 노동조합 연맹체, 노동운동 단체들 포함)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요구된다. 명시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 조직들과만 연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로서는 참여연대를 꼽을 수 있으며<sup>27)</sup>, 여타의 시민운동 단체들도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산업 부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 내부의 비리, 부정부패, 정경유착, 비자금문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제행위들, 재벌기업들의 내부자 거래의 비리, 외부 하청에서의 문제, 용역 노동자 고용상의 문제점 등 제반 문제들에 관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의 고발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 확립 뿐만 아니라 산업 민주화를 위하여도 요청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의 역할이다.

---

27) 참여연대의 노동운동 연대 전략에 관하여는 이대훈(1996)과 참여연대(1995a)를 참조할 것.

## 제 4 장

###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 : 연대경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여연과 여협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왔으며, 연대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보다 그 역사와 발전 정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문별 발전정도에 있어 불균등 발전의 양상을 보이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주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부문, 여성노동자들과의 관련성이 높은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과 관련된부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여성문제 일반으로는 연대활동이 확장되지 않고 있는 불균등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부문,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일반의 문제부문, 여성일반의 문제부문으로 나누어 연대활동의 발전상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의 활성화와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전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반하여 불균등 발전을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의 발

전 수준에 적합한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바, 제5절에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할 현안 영역들을 검토하고, 제6절에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노동운동의 자세와 역할을 제시한다.

### 1. 여성노동자 문제

여성노동자들 문제의 핵심은 생산현장에서의 성차별<sup>28)</sup>의 철폐와 모성보호였으며,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특정한 문제들에 여성운동쪽에서 노동운동에 비해 먼저 관심을 기울였다.

60년대와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한 경공업에서의 저임금에 바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산업부문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여성노동자들은 극도의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 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전체적 노동통제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노동조합들이 아니라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었다. 여성단체들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생산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성에 의한 지배로 문제의식이 확대되며 생산현장에서의 성차

28) 생산현장에서의 성차별은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첫째,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여성에게는 특별한 조건들을 추가하는 차별 행위들. 둘째, 노동시장 분할에 따른 성별직종분리로서, 여성이 고임금과 고지위가 보장되는 전문직보다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판매·생산직종 등에 분할 편입되는 유형. 셋째, 동일 직종에 채용된 경우에도, 여성은 승진과 승급의 기회가 적은 부문, 기능과 숙련도가 낮은 부문에 배척되는 유형. 넷째,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등 비정규직에 높은 비율로 고용되는 현상. 이러한 성차별은 남녀간의 임금격차로 나타나는 바, 여성의 임금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임금의 89.9%를 차지하고 미국의 경우 68.2%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54.5%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현장에서의 성차별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강남식(1994), 이승희(1994a), 박기남·강이수(1994)를 참조할 것.

별 철폐, 즉 남녀간 고용평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자, 여성운동계에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항의를 통해 이 법을 개정하게끔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개정으로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서의 불평등이 규제되는 한편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성차별 없는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sup>29)</sup> 여성운동이 80년대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법 제정의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노동운동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노동운동이 남녀고용평등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운동이 90년대 들어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부터이다. 1992년 들어 전노협은 여연과 더불어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안의 수립에 협조하게 되었고, 뒤이어 1993년 전노협과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하 한여노협), 한국여성민우회(이하 여성민우회) 등과 여성노동자의 “여성노동자 고용촉진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주제하에 ‘3.8 여성노동자대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것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가 비롯되는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sup>30)</sup> 3.8 여성노동자대회의 핵심 주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으로서 고용 및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공동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1)</sup>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대회 당일 서울을 포함한 마산·창원지역, 인천지역, 울산지역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여성노동자대회의 행사 뒤에도 지

29)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개정 및 내용에 관하여는 이승희(1994b:197)와 이은영(1994:221-224)을 참조할 것.

30) 1992년도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에도 전노협 계열의 노동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나, 참여한 노동자들은 주로 여성노동자들이었으며 주로 지역별로 지노협과 여성단체들이 주최하는데 그침으로써 전국적인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전노협 1993: 247-249).

31) 1993년 3.8 여성노동자 대회의 공동 주최와 관련 사업들의 내용, 그리고 뒤이은 지역별 조직적 운동에 관하여는 전노협(1994: 213-217)을 참조할 것.

속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자대회에 뒤이어 1993년 연말까지 서울, 인천, 성남, 경기남부, 포항·경주, 울산, 광주 지역 등에서 단위 노조들이 모여 간담회를 지역별로 전개하였으며 12월에는 전국의 여성노동조합간부들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인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다음 해인 1994년에도 3.8 여성노동자대회를 공동개회하였다.<sup>32)</sup> 그리고 민노준과 업종회의 등은 여연 등의 여성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생산현장에서의 간접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을 규제하는 방향의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위한 2차 청원<sup>33)</sup>을 전개함으로써 1995년 7월 15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생산현장에서 성차별을 철폐하는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이라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sup>34)</sup>

생산현장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으로서의 모성기능 보호의 문제에까지 발전되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과 경총이 주도하는 ‘유급생리휴가제도의 폐지 기도’에 대하여 전노협, 병원노동조합연맹(이하 병노련), 사무금융노련 등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노동조합연합체들 뿐만아니라 가톨릭의대노조 등 단위 노조들도 여연, 여성민우회, 한여노협 등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성기능보호 투쟁은 다음 해까지도 지속되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하여는 유급생리휴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2) 1994년도의 3.8 여성노동자대회의 공동 개최와 내용에 대하여는 전노협(1995: 290-291)을 참조할 것.

33) 1995년 4월 여협도 여연 등과 함께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차 청원 운동에 참여하였다 (김금래 1996).

34) 1994년의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에 관하여는 여연(1995:16-17)을 참조할 것. 이러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의 결과 1994년 8월 4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인 남자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있게 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남겼다 (『주간 노동자신문』1996.1.5).

나아가서 국무총리와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들 앞으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 합리적인 여성노동정책을 제안하는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이 전노협, 민노준 등 비노총계열이 여성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여연과 여연 소속 단체들과 여성운동과 연대를 구축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한국노총은 주로 여협이 주최하는 토론회 및 좌담회들에 참가함으로써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참여한 여협의 세미나들은 주로 생산현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주요한 것들로서는 여협이 1978년에 주최한 ‘근로여성 문제 세미나: 한국산업발전에 있어서의 근로여성의 위치’, 1980년에 주최한 ‘취업, 보건, 교육에 관한 여성발전 세미나’, 1981년과 1982년에 주최한 ‘근로여성문제 세미나’, 1984년에 주최한 ‘여성차별문제’ 토론회, 1987년에 주최한 ‘결혼 퇴직 여성의 인간적 조명’, 1990년에 주최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 철폐를 위한 토론회’, 1991년에 주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과 과제’, 1993년에 개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방향 세미나’, 1994년에 주최한 ‘여대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등을 꼽을 수 있다. 여협측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와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측도 여성노동자문제와 관련하여 1981년에는 ‘근로여성 정책 토론회’, 1988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토론회, 1991년에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 1992년에는 ‘노동시장내의 성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과제’ 토론회, 1994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과 ‘노동현장에서의 남녀 차별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협 등이 참여하였다.<sup>36)</sup> 이러한 한

35)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과 유급생리휴가제 폐지의 기도와 이에 대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전개하는 연대에 관하여는 여연(1995: 16; 1994: 14; 1993: 24-25)과 전노협(1995: 289-290)을 참조할 것.

36) 여성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여협이 토론회와 좌담회 등을 주최하여 상호 참여하는 사례들에 관하여는 황석만(1996)과 여협(1995: 16-17)을 참조하기 바람.

국노총과 여협이 주최한 여성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주로 생산현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기능 보호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여성운동측이 주도하여 한국노총측이 가세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사업의 형식들도 주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공동의 사업이나 동원활동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의 기틀은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노동자 일반의 문제

노동자 일반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연대를 보인 부분은 주로 여성노동자들과의 관련성이 높은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두 가지 주제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둘째는 노동자들의 복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쟁점인 고용안정 문제는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시간제, 임시직, 용역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중심으로 하였다. 70년대까지 지배적이던 저임금과 전제적 지배의 자본측 전략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저항 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의 비판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측이 새롭게 추구한 대안적 전략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생산비용 절감과 경영합리화라는 명분하에 전개된 비정규직의 확대는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증폭되었고,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도 확산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노동시간을 작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공장 이전이나 인원감축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고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어도 새롭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충원하면서 해고되는 등 고용안정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운동계에서 주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사회쟁점화하며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였

는데, 이는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여연은 1992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상황을 쟁점화하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주도하는 자본측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노동자 일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sup>37)</sup> 한편 경기불황과 경영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휴폐업이 급증함과 동시에 생산현장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전노협은 1992년 고용안정의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으나 아직 여성운동과의 연대는 모색하지 않고 있었다.<sup>38)</sup>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증과 이들의 고용안정의 문제는 이처럼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공동의 관심사였으며, 이러한 관심의 공유는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3년에 들어 전노협과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사무금융노련은 여연,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과 연대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용역노동의 실태를 폭로하는 ‘용역노동의 실태와 대응’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용불안 없는 일터와 고용보장제도 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확보를 위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sup>39)</sup>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

37) 이러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의 사회 쟁점화와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모색에 관하여는 여연(1993: 25-27)을 참조할 것.

38) 전노협이 1992년에 펼치는 고용보장 사업에 관하여는 전노협(1993:97-108)을 참조할 것.

39)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에 관하여는 여연(1994: 14)과 전노협(1994: 126-7)을 참조할 것.



동의 연대활동은 1995년 들어 정부가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은 정부측의 명분과는 상반되게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막고, 자본측이 노동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기존의 근로자들을 비정규직화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파견 근로자들로 대체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40)</sup>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가져올 고용불안정의 심화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대항하여 민노준과 여연 이외에도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같은 시민운동단체들도 포괄하여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여 강력한 입법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공대위의 발족에 앞서 민노준은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측에 공동 대처하자는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한국노총은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근로자파견법 입법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sup>41)</sup> 그러던 차에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추진하던 민자당이 1995년 11월 2일 근로자파견제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했음을 발표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투쟁은 일단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sup>42)</sup>

둘째 쟁점인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

40)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들과 이와 관련된 공방에 대하여는 조순경(1993), 「주간 노동자신문」(1995.9.15; 9.8)과 민주노총(1995.10.23)을 참조할 것.

41) 근로자파견법 입법화에 반대하는 연대투쟁에 관하여는 민주노총(1995.10.23)과 「주간 노동자신문」(1995.10.3)을 참조할 것.

42) 민자당이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포기'보다는 '유보'의 성격을 지니므로 근로자파견법과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쟁점이라고 하겠다. 민자당의 입장 발표에 관하여는 「주간 노동자신문」(1995.11.7)을 참조할 것.

의 핵심을 이룬 것은 직장탁아소 설치의 문제와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문제였다. 직장탁아소 설치의 문제는 탁아소 설치 문제 자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여연과 여협 등 여성운동단체들에 의하여 탁아소 설치 및 지원의 문제의 일환으로서 제기되게 되었다.

여연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과 ‘탁아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의 제정을 앞두고 지역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와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사회) 등을 중심으로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탁특위)’를 결성하였다. 여연이 탁특위를 중심으로 펼친 활동은 주로 탁아문제를 사회여문화하는 작업이었으며, 탁특위가 제기한 탁아문제의 중심은 기혼 여성노동자들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탁아소와 민간 비영리 탁아소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탁특위의 활동은 주로 지탁연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탁아소의 문제도 주로 지역탁아소의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직장탁아소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실정이었다.<sup>43)</sup> 여연의 탁특위는 다음 해인 1991년에도 탁아법 시행령의 바람직한 내용과 탁아법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탁아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탁아지원의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와 보사부 등 관계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sup>44)</sup>

1991년까지만 하여도 여연과 탁특위에 의하여 주도된 탁아소운동은 주로 지역탁아소 문제에 중심이 두어졌으나, 탁특위의 핵심 구성원인 지탁연과 여노사회가 오리엔트, 여의도성모병원, 아남산업, 협진양행 등 노동조합들과 함께 1992년 4월 ‘직장탁아소 추진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직장탁아소 설치의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도 동시에 형성되게 되었다. 이후 전노협과 한여노협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여 보사

43) 1990년 탁특위를 중심으로 한 여연의 탁아문제 관련 활동에 관하여는 여연(1991: 6-9)을 참조할 것.

44) 1991년 여연의 탁특위를 중심으로 한 탁아소 운동에 관하여는 여연(1992: 9-10)을 참조할 것.

부에서 발표한 95년까지 보육시설 2만9천개소 확충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키고, 직장탁아소에 관한 비디오 시사회를 갖고, 성남 오리엔트 직장탁아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은 더욱 발전하여 같은 해 7월에는 「올바른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다. 동 지침서는 노동운동과 탁아문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직장탁아소 설치에 관한 정부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탁아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글을 실음으로써 직장탁아소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과 선전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더욱 발전하여 11월에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병원노련, 사무금융노련 등을 끌어들이어 직장탁아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정책 자료집인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은」을 공동 제작함으로써 직장탁아소 설치의 문제를 생산현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 모성기능 보호, 고용안정 등과 함께 여성노동정책의 주요한 한 부분에 올려놓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sup>45)</sup> 1992년부터 본격화된 직장탁아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더욱 발전하여 1993년에는 전노협은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함께 직장탁아소 확보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4년에는 민노준이 여연, 한여노협 등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sup>46)</sup>

한편 직장탁아소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가 전노협과 여연의 경우만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였지만 여협과 한국노총 사이에도 연대활동은 있었다. 한국노총은 여협이 1992년 개최한 ‘근로

45) 직장탁아소 설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의 발전에 관하여는 전노협(1993: 148-9, 248-250)을 참조할 것.

46) 직장탁아소 설치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여성노동자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1993년과 1994년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전노협(1994: 218-220)과 여연(1995: 16-17)을 참조할 것.

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협이외의 단체들이 개최한 세미나들, 즉 한국통일여성협의회가 1992년 주최한 '남북한 탁아제도의 비교'와 지탁연이 1993년 주최한 '탁아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정도의 관심은 표명하였다. 하지만 탁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정도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더구나 직장탁아소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단초를 보였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하겠다.

직장탁아소 설치 문제 이외에, 노동자들 일반의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연대활동을 벌인 또 다른 분야는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문제였다. 1994년 전노대 소속 병원노련과 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맹(이하 의보총련)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보연대회의)'에 여연이 참가함으로써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의보연대회의의 핵심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있는 전노대는 의보연대회의의 주된 활동 목표를 "전국민이 골고루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술 등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검사료가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선"(전노대 1994 : 14-15)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특별히 여성의 복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의보연대회의에 여연이 참여한 것은 국민 일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여연측의 요구는 "남녀 배우자의 혜택기준과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남녀차별 철폐, 산전후 관리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확대, 분만시 본인 보험금 제외"(여연 1995 : 42-43)였다. 이처럼 여성운동은 의료보험제도 운영상 행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불이익의 존재와 모성기능보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로 전개된 의보연대회의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하여 토론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범국

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활동을 지속하였다. 여성운동은 이러한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과의 연대투쟁의 결과로 산전산후 건강진단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분만시 본인부담의 제외 등의 요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노동운동의 경우, 전노협 차원에서도 전노대나 이후의 민노준과 함께 의보연대회의에 집행위원을 파견하고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 위원장들의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여의도에서 ‘의보통합 일원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경우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사업은 전노협보다는 전노대와 이후의 민노준에 의하여 사회개혁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95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의료보험 적용기간 180일 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sup>47)</sup>. 이처럼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효과적인 연대투쟁은 쌍방 모두 소정의 성과를 얻은 모범적인 연대사업의 선례를 남겼다.

### 3. 여성문제 일반

여성노동자 문제나 노동자 일반의 문제에 비하여 여성문제 일반에 관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대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회적 사업으로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여협은 1970년대의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1977년 가족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과를 얻은 다음, 1984년에 다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게 되자, 여협은 회원단체들을 포함한 41개 여성단체 대표들의 모임을 열어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조직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상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여협은 가족

47)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의 전개와 그 성과, 그리고 사회개혁 투쟁으로의 발전에 대하여는 전노대(1994:14-15), 여연(1995:42-43), 전노협(1995:195-202), 민노준(1995a: 74-75; 1995b:90)을 참조할 것.

법 개정의 성취를 위하여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서명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남성들의 서명을 필요로 하였으며 남성단체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가담하여 단위 노조별로 가족법 개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가족법 개정 서명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연도 1989년 가족법 개정운동에 적극 가세하였으며, 이러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의 결과로 1989년 12월 19일 가족법개정을 성취하게 되었다.<sup>48)</sup> 가족법 개정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1984년에 성사되었으나 일회성으로 끝남으로써 노동운동의 가족법개정 문제에 대한 열은 관심과 소극적인 연대활동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1984년에 있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가 있는지 10여년 후인 1995년 2차대전 당시 강제 징집된 정신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여성문제 일반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여성운동과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협과 여연 등 여성운동 단체들이 주도하는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였다.<sup>49)</sup>

아직 정신대 피해자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어느정도 지속되며 노동운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전개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정신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여성문제 일반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신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여성문제 일반에 관한 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노동운동측의 열은 관심과 소극적인 참여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노동자 문제나 여성노동자와 관련성이 높은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여성운동과의

48) 여협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족법 개정운동과 한국노총의 참여에 관하여는 여협(1993: 216-222), 김금래(1996)와 황석만(1996)을 참조할 것.

49)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5: 447-448)과 여연(1994: 21; 1995: 21-22, 75-76)을 참조할 것.

연대에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온 전노협 등 비노총계열보다 도리어 소극적이었던 한국노총이 정신대 문제 등 여성문제 일반과 관련한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국노총과 여협 사이에 축적된 연대의 경험과 연결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50)</sup>

#### 4. 연대의 활성화와 불균등 발전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여성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어,<sup>51)</sup> 여성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노동자 일반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위계적 관계의 최하층에 위치하여 노동조건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은 여성노동자들을 접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 1) 공통의 관심사

여연과 여협은 단체의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연은 1987년 “민족민주운동권의 이념적 지향과 방법론을 공유하고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빈민여성 등을 핵심 주체”로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90년대 들어 전업주부와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50) 80년대의 가족법 개정운동과 90년대의 정신대 대책 운동이 있기 전, 70년대에는 가족이라는 소비단위의 일차적 운영자인 여성들을 소비자로 규정하며 여성단체들이 소비자 보호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소극적이거나 한국노총은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소비자 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여협이 1975년에 주최한 ‘소비자보호운동 실무자 훈련’, YWCA가 1971년 주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방침’, 1972년 주최한 ‘사회문제 및 소비자 보호의 건’, 1973년 주최한 ‘국산품애용과 근로여성’, 1979년 주최한 ‘물가대책을 위한 긴급소비자 대회’ 등 각종 토론회와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황석만(1996)을 참조할 것.

51) 통계청(1994)에 따르면 전체 취업인구중 여성노동인력이 40.15%를 차지하고 있다.

서... 전업주부와 여성노동자, 중간층, 기층의 이해와 요구”(윤정숙 1994)를 반영하는 운동으로 운동의 중심과 폭에 있어 변모를 하였으나,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주요한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여협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적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여협 1993 : 387)으로 결성되었다. 여연이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로 조직된 운동단체들의 연합인 반면 여협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직능단체들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이념적 성향이나 운동목표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연대의 경험에 있어서도 여연은 민민운동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여협은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과의 연대 경향을 보이는 등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이념적 성향과 연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연과 여협은 여성차별에 대하여 여성권익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는 상호간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공동 투쟁을 할 수 있게 하여, 최근의 연대활동 사례들만 보더라도 1992-93년의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 1994년의 고용할당제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 1995년 채용시 용모제한 반대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활동, 성희롱 대책활동 등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차별과 성의 지배가 재생산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두부문은 가정과 생산현장으로서,<sup>52)</sup> 여성권익 향상을 운동 목표로 삼고 있는 여성운동이 생산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생산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은 여성운동의 핵심 사업의 하나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여성노동자들을 연계로 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임으로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들의

52) 생산현장과 가정을 성차별과 성의 지배가 재생산되는 가장 심각한 두 부문으로 꼽는 것은 여권이론(feminist theories)들의 여러 분파들을 함께 고려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권이론들에 대해서는 김영희(1994)와 이승희(1994a)를 참조할 것.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정 등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부문에 위치되어 있다. 노동조건 전반의 개선활동은 가장 열악한부문의 노동조건 향상에서 비롯되어야 하므로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부문에서도 노동조합이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53)</sup> 이와 같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일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성노동자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여성노동자라는 공통의 구성원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에 더하여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연결하는 생산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체들의 역할이었다. 여연은 여성민우회, 한여노협 및 산하 지역 여성노동자회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여협의 경우 근로여성문제위원회를 조직하고 근로여성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조직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여성민우회와 여성노동자회와 같은 조직들의 존재였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산업 부문의 노동조합들 및 연합체들, 즉 병원노련,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전교조 등이 존재함으로써, 이들 노동조합 조직들이 여성민우회와 여성노동자회들과 더불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의 조직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53)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현장에서의 성차별을 제도화 한 가장 '창조적'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합작품은 "가족임금(family wage)"(Hartmann 1979)제도로 알려져 있다. 가족임금을 남성노동자들의 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생산현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남성지배를 재생산할 수 있게 하여 여성을 더욱 더 가사노동에 묶어놓게 하였다. 이러한 가족임금 제도의 전복은 아직 답론내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까지 이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2) 연대의 활성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여성노동자 문제와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활발한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여성노동자 문제의부문에서는 생산현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모성기능 보호를 위한 유급생리휴가제의 폐지 반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일반의 문제의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 특히 근로자과거법 입법화의 저지, 노동자 복지의 일부인 직장탁아소 설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 문제부문과 노동자 일반의 문제부문에 대하여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쌍방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여성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 면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에 처해 있으므로 노동조건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개선시키는 전략은 당연한 선택이라 하겠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여성운동과 함께 전개하는 연대활동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에 있어서는 불균등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건 일반의 문제부문에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문제의 경우 연대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여성운동측이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 문제부문에서의 노동운동의 상대적 소극성은 여성문제 일반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증폭되어 노동운동이 여성문제 일반과 관련하여 여성운동과 연대활동을 펼친 것은 한국노총이 80년대의 가족법 개정과 90년대의 정신대 대책활동에 참여한 정도에 그친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유형에 있어서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 여성운동단체들인 여협과 여연을 비교하면, 여협의 경우 주로 한국노총과 연대하고 있고, 여연의 경우 주로 전노협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민주노조 세력들과 연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된 결합은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별성을 노정하고 있다. 여협-노총의 결합

은 주로 좌담회나 토론회를 주최하는 소극적인 연대활동의 방식에 의존하는 반면, 여연-민주노조의 결합은 시위와 집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 항의의 연대활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유형과 연대활동의 방식의 차별성은 참여하는 단체들의 이념적 성향과 사업추진 전략의 차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여성노동자 문제와 노동자 일반의 문제부문들에서의 연대활동에 전 노협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민주노조 세력들이 보다 적극성을 띤 반면, 여성문제 일반의 경우 한국노총쪽이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 세력들이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조직보존 투쟁에 역량을 빼앗겨서 여성문제 일반에 관한 활동에까지 참여할 자원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연대의 불균등 발전의 문제점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여성노동자 문제와 여성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발전된 반면, 여성문제 일반과 관련된부문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불균등 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54)</sup>

여성문제 일반의 경우,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전개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에 여연, 여협 등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을 포함하여 74개 사회운동 단체들이 참여하였으나, 노동

54) 노동운동이 여성운동과의 연대활동을 여성문제 일반에 까지 연장시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노동조건 문제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관심이 없어진다는 소극적 의미 이상일 수 있다. 여성문제 일반에 있어 남성들은 수혜자일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들 주도의 노동조합들이 남성들에 의한 '성의 지배'의 재생산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성문제 일반에 관한 연대활동을 거부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추론은 노동조합내의 여성간부의 낮은 비율과 같은 노동조합의 '성의 지배' 기구로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쉽게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운동의 경우 병원노련,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전문기술노련 등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노동조합 연합체들만이 참여하였을 뿐 전노협이나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sup>55)</sup> 뿐만아니라 전교조 여상교사들이 최초로 문제제기하여 시작된 채용시 용모제한에 대한 대책활동의 경우, 1994년 4월 여직원 채용시 용모를 제한하는 기업 44개를 고발하고 뒤이어 12월에는 기소추구를 하는 등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집요한 투쟁이 전개되었다.<sup>56)</sup> 채용시 용모제한은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성차별 문제로서 명백한 고용불평등 문제였으나 노동운동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운동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 5.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들

여성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의 대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서, 여성노동자 문제,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 여성문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여성노동자 문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영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무력화, 고용할당제의 정착, 모성기능의 보호 문제들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1993년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 한국통신 등 49개 업체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으며, 이들 위반 사례들의 90%는 모집과 채용에서 성차별을 한 혐의였으며, 주로 금융서비스산업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7)</sup> 이들 49개 업체들 가운데 8개 업체는 100만원의

---

55)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에 관하여는 여연(1994: 3-6; 1993: 8-9)을 참조할 것.

56) 채용시 용모제한 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여연(1995: 17-18, 91-93)을 참조할 것.

57) 남녀고용평등법의 무력화에 관하여는 「주간노동자신문」(1995.10.10)을 참조할 것.

벌금형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그 법의 구속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정부가 1995년 10월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써 공무원 채용시 고용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sup>58)</sup> 발표된 고용할당제는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부문에의 파급을 우려하는 자본측의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고용할당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고용할당제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모성기능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와 자본측의 생리·출산 휴가의 무급 전환 시도는 일시적으로 유보되었을 뿐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아직 불씨를 안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에서도 모성보호 비용을 공공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측과의 대립 없이도 여성의 모성기능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연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는 모성보호비용 지출로 인한 개별 기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추진하고 있다.<sup>59)</sup>

## 2) 노동자일반의 노동조건

정부와 자본은 노동운동이 여성운동의 집요한 연대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오는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파견법 제정기도에 대하여 여연과 민주노총은

58) 고용할당제의 내용에 관하여는 「한겨레 신문」(1995.12.28)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1995)를 참조할 것.

59) 여연의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추진에 관하여는 남인순(1996b:21)을 참조할 것.

물론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 전국연합 등의 민민운동 단체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노총도 독립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근로자 파견법 뿐만 아니라 정부측의 시간제 근로자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도 포착되고 있어 근로자파견법 반대투쟁의 지속과 더불어 연대 투쟁이 필요한 주요 현안이라고 하겠다.<sup>60)</sup>

### 3) 여성문제 일반

여성운동측에서 아직까지 쟁점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여성문제중에 임신중절의 문제가 있다. 임신중절은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산모의 위험이나 강간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하여 임신중절의 의료행위는 산모의 생명도 위협하는 비위생적인 여건에서 무자격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예가 많으며, 임신중절 의료행위로 인한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임신중절은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한의 일부로서 산모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중절 시술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부터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임신중절의 대상은 주로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들이어서 노동운동 또한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임신중절 문제는 고사하고, 동성동본 금혼제의 철폐나 군필남성 5%가산점 철폐에 대하여도 여성운동은 특정 종교분파와 정부 관계자들이라는 저항세력에 봉착하여 있으며,<sup>61)</sup> 이러한 여성문제 사안들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포함한 여타의 운동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0) 근로자 파견법 저지투쟁과 파견 근로자의 실태에 관하여는 제 5장의 관련 부분을 참조할 것.

61)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유립, 재향군인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저항세력들의 존재에 대하여는 김금래(1996)를 참조할 것.

## 6. 연대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자세

여성운동과의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운동측에도 일정한 관심과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sup>62)</sup>

첫째, 노동운동은 여성문제 일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전국지도부가 성차별 해소를 위한 10개 과제 혹은 강령 등을 제작하여 단위 사업장에 배포하여 홍보함으로써 남성노동자들의 여성노동자 문제와 여성문제 일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들도 여성노동자 문제나 여성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 문제부문에서도 주로 여성운동이 주도하고 노동운동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소극성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며, 단체협상에서도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쉽게 양보함으로써 여성노동자문제나 여성문제의 해결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에 있어 여성계가 시작하였으나 국회에 재청원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주도하는 등 노동운동 측에서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 집행부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체 노동조합 7,025개 가운데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22.5%이나 노조위원장들 가운데 여성은 308명으로서 4.4%에 불과하다. 여성위원장의 비율이 높은 산별연맹들로서 병원노련의 경우 여성위원장 비율이 37%이고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의 경우 12%이나 이들 노동조합에서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73%와 60%에 달한다.<sup>63)</sup> 노동

62) 여성운동과의 연대를 위하여 요청되는 노동운동의 관심과 역할에 관하여는 여성운동 관계자들과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필자가 정리·보완한 것이다.

63) 노동조합 조합원과 위원장들에서의 여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주간 노동자신문」(1995.12.12)을 참조할 것.

조합의 집행부 전체와 정책결정 기구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비율 최저선을 노동조합 정관에 명기하거나 전국 본부에서 지침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동조합내에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위원회로 가동하여, 여성국과 같은 집행역할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갖고 여성노동자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지닌 기구와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정책연대를 펼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사업장에서 성차별 문제에 관한 감시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단위사업장 내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신인사제도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성차별은 없는지, 감독직들에 의한 성에 의한 통제<sup>64)</sup>는 없는지, 노동자들 상호간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없는지 등을 감시·감속해 주어야 한다.

---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7년 최고치인 28.5%를 기록한 이래 줄곧 하락하여 1994년 현재 10.0%에 이르고 있다(정자환 1996).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 하락의 원인은, 첫째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전개된 신규 노동조합들이 남성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공업·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둘째 기존의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신규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에 집중된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노동조합내의 여성노동자들의 집행부 진출의 부진이나 노동조합의 여성노동자 이익대변의 미흡 등이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64) 성에 의한 통제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통제를 위하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예들을 조순경·이숙진·여난영(1992)을 볼 것.



## 제 5 장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 : 연대경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과 같은 여타의 신사회운동과의 연대와 비교하여 매우 부진하였다. 환경운동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반핵과 환경보전의 영역을 비교하면, 반핵 부문에 비하여 환경보전의부문이 생산현장의 작업조건과 연관되어 있어 노동운동이 환경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반핵 부문과 관련해서는 환경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된 반면, 노동운동은 반핵 부문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환경보전의 영역에 있어서도 환경운동과의 연대활동을 별로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반핵의 영역과 환경보전의 영역에서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한 여타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의 진전을 검토한 다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이 부진하였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후반부에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발전의 방향 및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환경오염의 핵심인 산업공해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이라는 문제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에 토대하여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

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다. 제5절에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이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부진하였던 반면 지역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전개된 사례들도 있어, 특히 모범적인 울산지역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사례를 심층분석함으로써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는 쌍방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연대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자세와 역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반핵 영역

반핵의 영역에서는 전국연합이나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이하 진정추) 등과 같은 민민운동권 단체들도 포괄하는 광범한 연대활동이 전개되었으나 노동운동은 연대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sup>65)</sup> 반핵의 영역에서 환경운동이 전개한 가장 활발한 연대활동으로는 1993년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연대투쟁과 1994년 ‘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과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연대투쟁을 꼽을 수 있다.

1993년 10월 러시아가 동해안에 핵폐기물 900톤을 투기한데 이어 또다시 핵폐기물을 투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곳은 동해의 최고 어장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서, 동해의 해류의 흐

65) 환경보전의 영역에 비하여 반핵 영역에 상대적으로 진보적 세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Buttel 1987). 따라서 반핵운동가들은 환경보전 영역의 환경운동가들에 비하여 훨씬 더 진보적이며 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이나 좌파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연대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환경보전 영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환경운동의 핵심이 초기에 비하여 현재 반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개인들의 소비행위를 비난하는 부분이 부각됨으로써 운동 전반의 진보성이 퇴보되고 반자본성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름을 고려하면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은 러시아 연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 태평양까지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린피스가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핵폐기물 투기해역의 방사능 오염도는 평균치를 7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마저 러시아 정부의 2차 핵폐기물 투기를 앞두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채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자 환경운동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어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투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과 일체의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동해에 투기한 핵폐기물은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량의 1천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함으로써 동해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에 항의하였던 운동세력들은 재결집하여 일본정부에도 동해에 투기한 핵폐기물의 내용과 규모를 공개할 것과 동해에 대한 핵폐기물 투기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이와같이 러시아와 일본에 의한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항의하는 운동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이후 배달녹색연합을 구성하게 되는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연합과 진정추와 같은 민민운동단체들과 결합함으로써 환경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이에 노동운동은 참여하지 않았다.<sup>66)</sup>

핵의 공포에 관한 한 비단 러시아나 일본과 같은 외국정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의 집요한 핵발전소 건설과 핵폐기장 건설 추진에 의하여서도 증폭되고 있었다. 1994년 들어 정부는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핵폐기장 건설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수행에 저항하여 해당 지역별로 산발적이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투쟁이 빈발하고 있었다. 1994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수행에 저항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투쟁은 ‘삼척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투쟁’, ‘고리 핵폐기장 건설

66) 동해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핵폐기물의 투기에 항의하는 연대투쟁에 관하여는 환경운동연합(1994: 25-37)을 참조할 것.

및 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투쟁', '양산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장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울진 핵폐기장 설치 반대 투쟁', '핵폐기장 허위광고 관련 항의시위' 등 그치지 않고 전개되었다.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전개된 반핵투쟁은 정부와 언론에 의하여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배달녹색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정부의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과 핵폐기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반핵운동단체들의 연합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발족한 것이 1994년 11월 22일 결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였으며, 여기에서도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형성되었으나 노동운동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sup>67)</sup>

## 2. 환경보전 영역

환경운동의 양대 축인 반핵과 환경보전 가운데 노동운동과의 친화성이 높은 영역은 반핵 보다는 환경보전이라고 하겠다. 거주지역의 환경오염은 상당부분 산업공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의 주된 근원지의 하나는 생산현장인 것이다. 따라서 생산현장의 작업조건과 직업병의 문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하겠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은 한국노총과 전노협이 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공해없는 맑은 생활환경을 실현해 나간다”(한국노총 1995b : 5 ; 1995a)라는 강령을 1995년 개정된 10대 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노협 또한 “공해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쟁취한다”(전노협 1995 : 7)는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sup>68)</sup> 하지만 노동운동의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

67) 1994년 지역적으로 전개된 반핵운동의 전개와 전국적인 연합체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 관하여는 환경운동연합(1995: 31-32, 68-69)과 배달녹색연합(1995: 42-43)을 참조할 것.

68) 전노협과 업종회의에서 출발한 민주노총도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

심의 천명은 다분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실제로 전국적 수준에서 전개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 생산현장에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하는 열악한 작업조건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단체들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전개한 전형적 공해유발 기업들의 불매운동에 노동운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노동운동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실천적 의지가 결여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69)</sup>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거의 전개되지 않았으나, 지역 수준에서는 초보적이거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수준에서 전개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비교적 일회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활동으로는 대구 비산 염색공단 폐수방류와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유출에 대한 대응을 꼽을 수 있다. 일회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매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보이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는 울산지역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들 수 있다.

대구 비산 염색공단(이하 염공)이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은 1993년 10월 6일이었다. 염공 노조는 염공이 1990년 1월부터 15개월 동안 공장폐수를 금호강에 불법방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관련자료와 사진 등 증거물까지 제시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의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과 함께 폭로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노조측은 이미 1990년 12월 염공이 폐수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대구지검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은 비밀배출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었다. 하지만 1993년 염공 노조의 폭로에 뒤이어 염공측은 혐의

---

도를 개혁한다”는 내용을 강령에 포함하여 소극적인 수준에서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민주노총 1995.10.23).

69) 1993년과 1994년에 환경운동이 전개한 공해유발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에 관하여는 제 6장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부분을 참조할 것.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의 염공 폐수 불법방류에 대한 즉각적 재수사와 관련자들의 사법처벌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검찰은 염공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비밀배출구를 확인하게 되었고, 염공 측에 의하여 무고혐의로 고발된 노조위원장 한씨는 1994년 2월 23일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다.<sup>70)</sup> 이 사건은 1994년 국회 노동환경위의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어 대구지방 환경관리청과 대구 염색공단에 대한 환경감사가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염공이 제출한 폐수기준치 완화 요청을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염공의 환경오염 행위는 철저히 응징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sup>71)</sup> 염공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폭로를 계기로 형성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귀중한 성과를 얻게 되었으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연대활동으로 발전되지는 못한 한계 또한 보여주었다.<sup>72)</sup>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 유출은 대우조선 노동조합 부위원장 출신인 이행규씨가 1990년부터 개인적으로 조사해온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사건을 1994년 국정감사에 고발함으로써 국회 노동환경위의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이행규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증빙자료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운동연합이 현장답사를 통하여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대우조선은 일반 매립장으로 허가 받은 곳에 특정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으며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특정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장은 몇 군데 있으며, 공장이 가동

70) 염공의 비밀배출구를 통한 불법 폐수방류의 폭로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 등에 관하여는 황상규(1996)와 환경운동연합(1994: 54, 203)을 참조할 것.

71) 염공 폐수방류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확대 전개되는 사건의 과정에 관하여는 환경운동연합(1995:45-47,160)을 참조할 것.

72) 염공 노조에 의하여 비밀배출구의 사실이 폭로된 시점은 염공측의 노조 와해 노력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발발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환경운동을 비롯한 제 사회운동들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이 염공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었더라면 염공의 불법 폐수방류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공해 전반과 관련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이 더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되기 시작한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연평균 5천톤 정도씩 공장폐수를 바다에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 유출에 대한 제재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라기 보다는 환경의식이 투철한 한 노동자의 집념의 결실이라고 보아진다.<sup>73)</sup>

대구 비산 염색공단의 불법 폐수방류나 대우조선의 산업폐기물 불법처리의 경우에 비하여 울산의 경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울산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운동과 한국 티타늄공장 온산공단 입주 반대 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착수함과 동시에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한편 현충린 산하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나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하는 소각장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폐기물 소각시 수은, 납,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 대기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극도의 맹독성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대량 배출된다는 점이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현대정공노조, 해성병원노조, 현대종합목재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등 현대그룹 산하 노조들을 포함하여 1993년 7월 26일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하여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수차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현대정공 노조원들이 “소각장 승인 불허”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였고,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과 소각장 인근의 염포동과 양정동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강력한 연대투쟁에 직면하여 부산 환경청은 관련 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 소각장 설치승인을 반려키릴 방침을 밝혔고 결국 11월 17일에는 현대중공업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은 같은 달 22일 소각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sup>74)</sup>

73)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한 사건의 전개에 관하여는 환경운동연합(1995:45-47; 1993: 64-69), 황상규(1996), 성낙진(1995)을 참조할 것.

74)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투

한국 티타늄공장이 1995년 3월 온산면에서 착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 티타늄 공장의 생산공정에서 포스켄,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맹독성 가스들이 유출되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온산공단지역과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들과 공동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한국 티타늄공장의 대기오염 악화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2월 27일에는 현충련 등과 더불어 ‘공해공장 한국 티타늄건립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한국 티타늄운동 건립 저지를 위한 1백만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장부지를 강제점거하여 농성을 펼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티타늄측이 공장건설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대책위원회는 공장부지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온산면의 경제개발을 위하여는 한국 티타늄공장을 온산면에 유치해야 한다는 사이비 환경운동단체들에 의하여 도끼 등에 의하여 천막이 파손되는 등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자본측과 일부 언론들에 의하여 이러한 투쟁과정이 환경운동단체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오도되는 등 수난을 당하면서도,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현충련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한국 티타늄공장의 건립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sup>75)</sup>

현충련과 산하 노조들이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전개하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나 한국티타늄공장 건설 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1993년에 전개한 ‘사연댐 식수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1995년 ‘대화강 되살리기 운동’, 1995년 말 ‘현대 강관주식회사의 냉각압연공장이라는 공해공장을 건설하려는 기도의 저지 운동’ 등에서도 노

쟁에 관하여는 「울산매일」(1993.7.27; 8.8; 11.16; 11.18), 권기백(1993),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통신」(제17호: 38-39)를 참조할 것.

75) 한국 티타늄공장 건립을 중심으로 한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역할과 노동운동-환경운동의 연대에 관하여는 「부산일보」(1995.2.28), 「21세기 푸른울산」(1995.12: 49-53), 「녹색마을」(1995.4:11-13),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통신」(제18호:58-59) 등을 참조할 것.



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가치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sup>76)</sup>

### 3. 연대의 부진 및 원인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 가운데 가장 저발달된 부분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이다. 전국적 수준에서의 연대활동은 거의 없었고 지역적 수준에서나마 단초적인 연대활동이 발견되고 있다.

#### 1) 연대의 부진

환경운동연합이나 배달녹색연합의 운동 목표는 반핵과 환경보전이다. 물론 운동 목표상으로는 배달녹색연합의 경우 생태계보전의 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나, 실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생태계보전의 활동과 환경보전 활동이 결합·혼합되어 진행되므로 양 단체의 사업상의 핵심은 반핵과 환경보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운동의 경우 반핵 영역에 있어서는 주로 민민운동과 연대하고 있는 반면,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잠재력이 더 높은 환경보전의영역에서조차도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별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문제는 여타의 사회운동들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지닌 환경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여타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는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보전의 경우 환경운동은 동일한부문의 환경운동단체들과 상호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운동 내적 연대의 발달은 우선적 연대 대상 단체를 지명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제1순위로 상대 환경운동단체를 지명한 비율이 71.3%에 달하여 여성운동의 42.6%와 시민운동의 34.6%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운동단체

76) 이러한 연대활동에 관하여는 「주간 노동자신문」(1995.11.14), 환경운동연합(1994: 180), 울산환경운동연합(1995) 등을 참조할 것.

의 내적 연대의 긴밀도는 1994년 4월 환경운동연합과 배달녹색연합 등 33개 단체들로 한국환경회의를 결성하여 연대체계를 형성하는 현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sup>77)</sup>

## 2) 노동층 관심의 선연적 수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은 주로 환경보전 부문에서 미약하나마 전개되고 있을 뿐, 반핵 부문에서는 주로 환경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운동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핵문제보다는 산업공해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노동운동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환경보전 부문에 있어서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며, 그나마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연대활동은 찾기 어렵고 단초적인 연대활동이 지역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겠다.

전국적 수준의 노동운동 측에서도 한국노총과 전노협 모두 환경보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다<sup>78)</sup>. 하지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전국적 수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운동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피상성은 1994년 환경운동단체들의 중심으로 전개된 환경오염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노동운동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잘 확인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해유발 기업들을 제재하고 친환경적 생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등과 함께 1993년 10월 27일 '상습 오염배출업소 불매운동 실무협의회(이

77) 한국환경회의의 결성과 활동에 관하여는 환경운동연합(1995: 42-47)과 배달녹색연합(1995: 42)을 참조할 것.

78) 한국노총, 전노협, 민주노총이 채택한 강령의 환경보전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제 5장을 참조할 것. 이들 뿐만 아니라 조선노협(전국조선업종노조협의회)도 강령에서 자연환경보호와 공해방지투쟁을 강조하고 있다(황상규 1996).

하 불매운동협)’를 결성하였다. 불매운동협은 환경처가 제공하는 적발업소 명단을 바탕으로 12월 8일 상습오염배출업소 24개 업소를 선정한 다음 뒤이어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1차로 선정된 24개 업소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기업 8개를 선정한 다음 1994년 3월에는 최종 불매운동 대상업소 선정에 위하여 현장조사도 실시한 다음 해당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sup>79)</sup> 이렇게 반년여에 걸쳐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전개된 상습오염업체 불매운동에 노동운동은 어느 단계에서도 연대활동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공해방지’의 강령은 실천의지가 결여된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sup>80)</sup>

### 3) 지역적 수준에서의 연대발전의 단초

지역적 수준에서 전개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경우 대구비산 염색공단의 비밀배출구 사건,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사건, 울산 지역의 연대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대구비산 염색공단의 경우와 대우조선의 경우는 특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발발한 일회적 연대에 그쳤을 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연대활동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대구비산 염색공단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데 반하여,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보다는 노동자 한 개인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79) 이렇게 장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오염업체 불매운동이 얼마나 큰 실질적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운동의 직접적 결과에 있어서 보다는 환경운동에 의한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응징의 가능성과 위력을 과시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이다.

80) 1993년에서 1994년에 걸쳐 전개된 상습오염기업 불매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하여는 환경운동연합(1994:17,63-71), 「한겨레신문」(1994.3.16)과 최예용(1994)를 참조할 것. 또한, 1995년 11월 남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배달녹색연합이 주도하여 전개한 LG 제품 불매운동에도 노동운동측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김제남 1996).

대구비산 염색공단과 대우조선 사례에 비하여 울산지역에서 전개된 환경보전을 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일회적 수준을 넘어서는 연대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의 저지, 한국 티타늄공장의 온산 입주 반대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으며, 더 나아가서 사연댐 식수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태화강 되살리기운동, 현대강관 냉각압연공장 건설 저지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울산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모범은 지역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앞으로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환경보전을 위한 연대활동 일반을 위한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sup>81)</sup>

#### 4) 연대부진의 원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이 부진한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과 기업의 공통의 이해관계의 존재를 들 수 있다.<sup>82)</sup> 환경오염의 발생지 부담원칙에 기초한 환경오염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는 노동과 자본이 분배할 이윤의 크기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기업은 환경보호 비용의 사회화를 선호하고 환경규제에 저항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의 물질적 이해관계는 기업별 노조체계하에서 더욱 고질화되어 노동조합은 환경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기피하는 경향을 만든다.<sup>83)</sup>

81)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지역의 모범적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기초와 전개과정과 그로부터 배울점 등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82) 노동자들의 기업관련성과 환경의식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돈문(1995a)을 참조할 것.

83) 이에 더하여 환경과피로 인한 비용은 흔히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과피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Redclift 1984). 이러한 환경과피 효과 발생의 시간적 지

둘째, 환경운동이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례들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 환경운동이 불신을 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공추련 시기만 하더라도 민민운동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독점자본을 적대시하였으나 환경운동연합의 시기에 오면 시민들에 의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자본측에 대한 적대감은 감퇴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 단체들이 공추련 시기에 비하여 자본측에 대하여 덜 적대적이고, 1992년 리우회의 참석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기업들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1994년 지구의날 기념 환경음악제에서는 5대 재벌기업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는 등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기업들측으로부터 협찬 또는 지원금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sup>84)</sup> 자본측으로서는 폐놀사건 이후 문제시되고 있는 기업의 환경오염행위에 대처하여 매체들을 통한 광고와 환경운동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호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조작하고자 하였고, 재정에 대한 회비의 충당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환경운동단체들의 경우 정기적 지원은 거부하더라도 사안별 지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환경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불신의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상호불신이야말로 공동의 적대자인 자본에게 분할지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sup>85)</sup>

---

체(time lag)는 당장의 물적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로서는 물적 자원의 배분 문제에 비하여 환경보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84) 한국의 대자본들이 환경운동 단체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들에 대하여는 이득연(1994)을 참조할 것.

이처럼 대자본들이 환경운동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포드재단은 시에라클럽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와 필라델피아 전력회사는 미국자연보호협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Humphrey & Buttel 1982).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재정지원을 통한 “엘리트의 매수(elite cooptation)”가 급속히 성장하던 미국의 환경운동을 1970년대 후반을 전후로 극적으로 쇠퇴하게 만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85) 실제로 자본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저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대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이 점

셋째, 노동과 건강연구회 등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전문 영역으로 삼는 운동단체들의 활동의 강화는 환경운동으로 하여금 생산현장의 작업조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결고리인 산업재해와 직업병이라는 작업조건의 문제를 통한 양자간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

#### 4. 연대의 발전 가능성 및 전략

산업공해와 직업병이 동일한 원인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적대자에 대처하여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연대활동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연대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다. 연대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네 가지로 들 수 있겠다.

첫째, 노동자는 산업공해의 최대의 피해자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는 지역주민으로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산업공해를 포함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는다는 점 외에도, 산업공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되는 작업현장에서 노동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도 유해물질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산업공해의 최대의 피해자이다. 또한 산업공해의 주범은 생산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재료와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무시한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의 동기이다.<sup>86)</sup> 자본은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

에서 자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한다(Schnaiberg & Gould 1994). 자본은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분배의 형평과 환경운동이 요구하는 환경보전 사이의 갈등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기업측의 환경보호비용을 높히려는 환경운동에 대하여 적대적 자세를 갖게 하고, 환경운동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에 의한 사회적 형평과 물적자원 배분의 증대 요구가 기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홍보하는 한편 환경운동단체들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저해하는 한편 상호 대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할지배를 추구하는 것이다.

86)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핵심인 자본축적의 논리가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훼손함으로써 양자간의 모순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하에서는 필연적이라고하여 O'Connor 등은 이를 자본주의의 제2모순(second contradiction)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오염물질 생성의 최소화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위험속에서 작업을 하며 주민으로서도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들과 주민은 산업공해의 공동의 피해자이며 산업공해의 원흉은 이윤극대화 논리에 빠져있는 자본측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연대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둘째,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80년대 중반 온산공단지역 주민들의 공해병으로 인하여 극렬하게 전개된 반공해주민운동을 환경운동연합의 원초 조직인 당시의 공해문제연구소가 개입하여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이로부터 환경운동은 산업공해의 심각성과 더불어 작업환경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페놀사건 이후 최근 기업들은 환경오염의 원흉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유포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환경운동단체들의 행사들을 지원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자기 기업의 작업환경개선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장재연(1995)은 대기업들이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는 까닭인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감시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

이라고 부른다 (O'Connor 1988; Spence 1993; Skirbekk 1994). 이러한 자본주의의 제 2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인 제 1모순과 더불어 자본주의 핵심적 동력인 자본축적 논리가 자기파괴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과 양립될 수 없음을 지적해 준다. 이러한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는 자본이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물질 자원들을 사유재산으로 보는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Buttel 1987; Dwivedi 1986). 자본은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천연자원들에 사적 가치(private value)를 부가함으로써 자원고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생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비용의 사회화를 요구함으로써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자본의 태도는 자본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극단적인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고 진단한다. 대기환경 기준과 작업환경 기준을 비교하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대기환경 기준이 0.03ppm인 반면 작업환경 기준은 2ppm으로서 대기환경 기준의 67배에 달하며, 이산화질소의 경우 대기환경 기준은 0.05ppm인 반면 작업환경 기준은 3ppm으로서 60배에 달한다. 또한 한국의 작업환경 기준과 미국의 작업환경 기준을 비교하면, 미국은 1988년  $0.15 \mu\text{g}/\text{m}^3$ 이었으나 1995년  $0.05 \mu\text{g}/\text{m}^3$ 로 감소되었는데 반하여, 한국은  $1.5 \mu\text{g}/\text{m}^3$ 으로서 미국의 1988년 기준치의 10배이며 1995년 기준치의 30배에 달한다.<sup>87)</sup> 이에 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오염 기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기준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회 여론화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기업들의 부도덕하고 위장된 “환경친화적 기업”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sup>88)</sup>

셋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달녹색연합에서 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한 일반 회원들을 환경운동에 참여시키고 동시에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들을 노동자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느끼게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89)</sup> 예를 들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하천과 해안을 대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염정도를 관찰하고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환경기행 등을 실시하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동시에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87) 이상에서 제시된 환경기준치들에 관하여는 장재연(1995)을 참조할 것.

88) 이 부분에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뿐만아니라 노동과 건강연구회 등 산업재해 전문단체들도 포함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노협외의 경우 산재추방과 산재환자 치료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1994년에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노협,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투쟁하여 산재환자 강제치료 종결과 산재 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사회 쟁점화한 바 있다(전노협 1995: 295-299). 또한 최근 민주노총은 재해대책에서 직업병의 문제로 관심의 초점을 이행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어 작업환경과 관련한 연대활동은 환경운동에 의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겠다.

89) 배달녹색연합이 전개한 프로그램들에 관하여는 김제남(1996)과 배달녹색연합(1995: 28-35)을 참조할 것.



지역공동체 만들기 주민잔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과 노동자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이 서로 친숙해지고 지역의 환경문제와 그 해결 노력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5. 연대활동 모범사례로서의 울산지역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이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거의 전개되지 못하였지만 지역수준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도 있다. 울산은 이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은 위에서 보았듯이 1993년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저지운동과 사연댐 식수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1995년의 한국 티타늄공장의 온산 입주 저지투쟁, 태화강 되살리기 운동, 현대 강관주식회사 냉각탑 연공장 건설 저지운동 등에서 모범적인 연대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울산지역에서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성공적인 발전은 울산지역이 산업공해가 심각한 지역이라는 점,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산업공해로 인한 주민 이주 등으로 노동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 등 울산지역의 특수성이 기여한 바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환경운동에 조직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울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체계적이고 집요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초기부터 노동조합 간부들을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시켰다. 1994년 2월 정기총회의 자료에서 보면, 환경운동연합의 노동환경위원장을 현대정공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 윤복근이 담당하고, 기획사업위원장은 울산대 노조 사무국장인 김지택이 담당하는 등 노동조합간부들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하였다(울산환경운동연합 1994 : 12). 다음해 2월의 정기총회에서는 그에 더하여 회원조직위원장에 울산대 노조위원장인 우덕삼을 임명하여 집행위원으로 참여시켰다(울산환경운동연합 1995 : 19). 현대정공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인 윤복근은 산재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되는 노동자들의 역할은 “투철한 고발정신이다. 노동자는 환

경오염의 주범인 산업체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자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환경의 피해는 공론화되어 개선되어야 하고 노동자는 이를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고발은... 회사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통신 제13호 : 3)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소각장 저지활동을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현충련 산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저지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만든 견인차역할을 함으로써 연대활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sup>90)</sup>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노동환경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하면서 기업체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활동 및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회원조직활동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노동조합 간부들에 의한 추진을 통하여 노동조합들과의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노동조합과의 연대강화와 노동환경측정사업을 1995년도의 주요 사업계획으로 하는 등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sup>91)</sup>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집행부에 참여시키고 노동환경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중요한 사업계획의 한 부분으로 설정함으로써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조직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항상 현충련 등 노동조합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동조합들은 해당 환경운동의 초기부터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노동조합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상호신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연대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울산

90) 윤복근의 현대중공업 소각장 설치 저지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선언에 관하여는 「울산매일」(1993.81)을 참조할 것.

91) 노동환경위원회의 정관상의 역할 규정과 1994년도 사업계획안에서의 역할, 울산환경운동연합의 1995년도 사업계획(안) 등에 관하여는 울산환경운동연합(1994: 7-11, 13-16; 1995: 20-22)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통신」(제18호: 50-52) 등을 참조할 것.

환경운동연합은 노동조합의 작업조건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1993년 10월 12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 선적 선박내의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박내로 비밀 잠입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등 지원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sup>92)</sup> 이러한 환경운동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노동자들의 고발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고발로 환경감시단이 출동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해온 사례들로서는 1995년 2월 18일 울산시 환경사업소 여천 처리장 폐수방류의 사례와 3월 11일 동양폴리에스터 비밀배출구 고발 등을 들 수 있다.<sup>93)</sup>

이상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서로 도움을 주며 산업공해와 직업병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연대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일 수 있는 것이다.

## 6. 연대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자세

환경운동과의 성공적인 연대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청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sup>94)</sup>

첫째, 노동운동의 관심의 확대가 요청된다. 노동운동은 물적 자원의 분배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생산현장 밖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이러한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의 한 표현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공장지대의 산업공해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다.

둘째, 자기운동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노동운동측에서 노동문제가 가

92) 환경운동연합(1994:183)을 참조할 것.

93) 이러한 고발에 힘입은 환경감시단의 활동에 관하여는 녹색마을(1995:4)를 참조할 것.

94) 노동조합에 대한 요청에 관한 부분은 환경운동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임.

장 중요하고 환경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환경감시단원으로서의 역할이 요청된다.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의 내용과 유해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며, 생성된 유해물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의 내용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하는 환경감시단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그러한 작업환경과 오염물질의 생성에 대한 감시를 하는 기업별 환경감시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환경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이야말로 산업공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기틀이 될 것이다.

## 제 6 장

### 연대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분열

위에서는 개별 신사회운동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할 현안 영역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개별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위하여 노동운동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이미 노동운동이 수년전부터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의 확대,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 신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을 지향하는 전향적 자세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앞 장들에서 개별 신사회운동들이 지적한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들과 역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의 발전에 있어서 신사회운동 일반이 최대의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분열의 문제와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다.

#### 1. 노동운동의 전향적 자세

노동운동은 이미 집단이기주의나 물질적 이해집단으로 고립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신사회운동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대지향적 자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공유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한국노총은 수년전부터 노동운동의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 원칙에 따라 국민속에 뿌리내리는 노동운동을 전개한 바, 이는 노동운동이 중산층 및 사회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데 의미있음”(한국노총 1994 : 444), “노총의 대외 교섭활동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복지사회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한국노총 1994 : 416)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넘어선 범국민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제 사회운동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연대지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 진영 또한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이 임금투쟁을 펼칠 때마다 국가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밖에 모르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이라고 몰아붙인다. 노동자들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지만 이같은 선전이 상당히 먹혀들고 있음을 그들 자신도 알아야 한다”(권영길 1993 : 34-35),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만약 노동운동 진영이 시민운동을 배척해버린다면 시민운동체 또한 노동운동 진영에 배타적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조와 국민들의 의식변화 속에서 변혁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고립화되고 결국 노동운동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노동운동이라고 해서 시민운동의 활동내용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제 운동방법에 있어서 과감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권영길 1993 : 39-40)고 말하고 있다. 이도 또한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리고 여타의 사회운동으로부터의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문제 이외의 범국민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 사회운동들과 적극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을 중시하고 범국민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 사회운동들, 특히 신사회운동과의 연대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이러한 전향적 자세들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과 폭넓은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민운동과 여성운동과의 연대활동은 상당한 진척을 보여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 2. 노동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의 요청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 논의된 개별 신사회운동이 요구하는 노동운동의 연대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에서, 개별 신사회운동들의 요구는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의 연대를 위한 자기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사회적 관심의 확대, 연대방식의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일정한 역할의 수행, 연대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관심의 확대가 요청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은 물적 자원의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는 경제적 이해집단으로서 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이미지’는 노동운동의 신사회운동들로부터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사회운동들은 노동운동이 관심을 확대하여 생산현장 밖의 사회전반의 문제에까지 관심의 지평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문제, 여성문제, 환경오염문제, 민주주의 심화 문제 등 범국민적 사안들에 대한 관심의 폭과 수준을 높일 것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연대방식에서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의 확대가 미진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노동운동은 노동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문제들은 2차적 문제들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으므로써 ‘자기운동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운동중심주의는 연대활동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식의 운동패권주의로 발전하게 되어 노동운동이 연대활동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에 집착한다면 신사회운동들과의 연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연대방식을 수용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연대활동을 위하여 노동운동의 일정한 사회적 역할이 요청된다. 시민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기업 내에서 포착되는 부정부패와 비리, 불공정거래를 과감히 고발할 수 있는 내부비리 고발자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고, 환경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성분과 유해물질의 불법처리 여부에 대한 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요청되고, 여성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행, 성희롱, 성에 의한 노동통제 등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노동운동은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러한 책임의식 하에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연대활동에 걸맞는 노동운동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신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포함한 모든 외부 세력들과의 연대의 창구를 정치국 또는 대외협력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사안별 연대 수준의 연대활동에나 어울리는 후진적인 조직구조이다. 개별 신사회운동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연대활동의 수행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운동과의 연대를 위하여는 여성운동단체들의 노동위원회와 정책을 조율하고 연대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지닌 노동조합의 여성위원회가 구성되거나 혹은 여성국의 권한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운동과의 연대를 위하여는 환경운동의 노동환경위원회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겸비한 산업안전부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연대발전의 최대 장애물 : 노동운동의 분열

위에 논의된 네 가지 요청 외에도, 모든 신사회운동단체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에서의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분열이다.<sup>95)</sup> 노동운동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어 양자를 동시에 포함



하는 연대활동의 경우 양자의 불화가 전체 연대활동의 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례들도 지적되었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조 진영 가운데 어느 한편과 연대활동을 전개하면 다른편으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당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국노총과 전노협,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세력이 연대를 한 대표적 사례들로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한국은행독립과 우리쌀지키기운동 정도였다. 1994년 4월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연대활동에서는 한국노총과 전노대가 공동 참여하였으나 연대활동을 주도한 것은 한국은행 노조와 국민회의였다. 1993년과 1994년 전개된 우리쌀지키기 운동의 경우, 1993년 3월 결성된 범국민대책회의에 한국노총이 전국연합과 함께 166개 단체들속에 가담함으로써 전국연합의 소속단체인 전노협과 한국노총이 간접적 연대활동을 한 셈이었으나, 1994년 3월에 결성된 범국민운동본부의 경우 전노대가 전국연합과는 별도로 개별 단체로 참여하여 전노대 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고문직을 맡으므로 연대에 참여한 194개 단체들속에서 전노대와 한국노총이 연대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세력이 연대활동을 전개한 경우는 노동문제 이외의 사안들로서 다수의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며 노동운동측이 주도적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연대운동의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나마 그정도의 연대활동도 찾기 어려우며, 참가단체들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노동문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대활동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하여는 서로 연대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노총이 노동문제와 관련한한 민주노총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한 강령과 유사한 운동목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공통된 반대 입장을 갖는 경우에도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활동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1995년의 ‘근로자파견법저지투쟁’의 경우, 전노협은 여연 등과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한국노총은 연대투쟁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95) 노동운동의 분열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기피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이다. 둘째는 이념적 목표의 차이로 인한 운동 전략의 차이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합법성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므로써 합법과 비합법적 수단의 구분 없이 동원을 통한 목표 달성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한국노총은 “제도성 게임(institutionalized game)”<sup>96)</sup> 전략을 취하고 민주노총은 “전투성 게임(militancy game)” 전략을 취하여 전략상의 상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념적 지향성이 달라도 여성권의 향상을 위한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여연과 여협의 여성운동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대상의 중복성으로 인한 마찰 때문이라 하겠다.

#### 4. 연대대상으로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분열과 그에 수반하는 불편한 관계는 신사회운동단체들로 하여금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연대대상으로서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 한다면 신사회운동단체들은 단연 민주노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민주노총의 선호

<표 2-1>에서 보듯이, ‘민주노총 선호도’의 평균값은 1.075로서 ‘한국노총 선호도’의 평균값 0.173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연대대상 최우선 순위의 경우

96) 제도성 게임은 제도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고, 전투성 게임은 제도적 장치들의 밖에서 동원을 통한 압력의 행사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대하여는 조돈문(1994a)를 참조하고,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와 멕시코 노동운동의 역사를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의 역학으로 설명한 것은 조돈문(1993, 1995b)를 참조할 것.

민주노총은 총 483명의 유효 응답자들 가운데 60명이 나와서 12.4%를 점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의 경우는 1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0.2%에 그치고 있다. 각 신사회운동단체들이 연대대상 최우선 순위로 동일운동내의 상대 단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노동운동단체를 연대대상 제1순위와 제2순위로 지명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효응답 483명 가운데 민주노총의 경우 116명으로 24.0%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의 경우는 7명으로서 1.4%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연합 선호도'도 0.921로서 '한국노총 선호도'를 훨씬 상회하고 거의 '민주노총 선호도'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대대상으로서 한국노총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민주노총을 선호하는 한편, 신사회운동단체들이 민민운동권의 전국연합을 기피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조사 결과는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민주노총이나 전국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탄압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들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은 한국노총과 같은 합법적 단체들과의 연대에 비하여 연대의 비용이 훨씬 클뿐만 아니라 이념적 성향의 차이로 인하여 신사회운동과 민민운동의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고 있다.

단체들간의 차별성을 보았을 때 민주노총에 비하여 한국노총을 선호하는 유일한 단체는 여협이다. 이는 여협이 그동안 한국노총과의 연대활동을 많이 축적하여왔다는 사실과 함께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연대활동의 축적이 미래의 연대대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경실련의 경우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의 경우 그동안 공선협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사협, 경제제도 개혁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오랜 기간동안 축적하여 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경우에도 '민주노총선호도'가 0.780으로서 '한국노총 선호도' 0.181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 2) 민주노총 선호의 의미

연대대상 우선 순위에 있어 한국노총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민주노총을 선호하는 것의 의미는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의미는 신사회운동 단체들이 한국노총의 내부 변혁을 원한다는 점이다.

둘째 의미는 한국노총이 신사회운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부 변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신사회운동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민주노총에 비하여 한국노총을 선호하는 단체는 여협이어서 결국은 한국노총은 여협과만 연대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 여협이 노동정책과 노동문제에 관한 가장 덜 친노동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협과의 연대활동으로 노동문제의 적극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3) 민주노총 선호 이유

그렇다면 신사회운동 단체들은 왜 연대대상으로서 민주노총을 선호하며 한국노총을 기피하는 것인가? 민주노총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노총을 기피하는 이유와 상통하는 문제이다. 그 이유들로서는 대체로 한국노총의 비자주성, 비민주성, 연대의 부정적 경험이 꼽히고 있으며,<sup>97)</sup>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하겠다.

첫째, 한국노총의 비자주성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에는 부적합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군사독재 정권 시기부터 군사독재 정권에 협조하여 다양한 친정부행사를 주관하였고 현재까지도 정부로부터 상당한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의존성과 정부로부터의 자주성 상실은 한국노총이 정부나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할 의향과 역량이 있는지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

97) 연대대상으로서 민주노총을 선호하고 한국노총을 기피하는 이유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사회운동관계자들의 토론과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노총이 사회변혁 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미지는 한국노총 상층부의 정치적 색채와 수구적 성격으로 인하여 더욱 보강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노총은 비민주적 조직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전국 수준의 중앙조직의 관료제화와 단위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들의 상대적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사회운동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주장하며 조직내 민주주의를 중요시한다. 이에 한국노총의 비민주적 조직 운영방식은 신사회운동 단체들이 한국노총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내부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단체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노총과의 연대로부터 얻은 부정적 경험이다. 민주노총에 비하여 한국노총은 신사회운동 단체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경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이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신사회운동 단체들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연대활동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례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동성, 사업추진 역량, 조직 가동력,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연대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 5. 노동운동의 통합을 향하여

국가와 자본이라는 저항세력에 대항하여 사회변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고, 신사회운동측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기피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이 노동운동의 분열이라고 한다면, 노동운동의 통합은 노동운동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신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하여도 필요불가결한 대전제라고 하겠다. 또한 최근 한국노총도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노총에서는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대의원 대회를 활성화하고, 중앙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며,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개혁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자주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쟁의기금을 확보하며, 재정자립을 달성함으로써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sup>98)</sup> 이러한 한국노총의 민주성과 자주성 강화의 계획은 신사회운동 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혁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 실현의지를 담보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현실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직 혁신의 계획을 수립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이라 하겠다. 이러한 민주성과 자주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부 혁신의 의지가 실현된다면, 신사회운동들에 의한 연대 기피 현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노동운동 양대 진영의 통합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으로 가는 길은 서로 상대 단체를 연대대상으로서 기피하지 않으며, 노동문제에까지 연대활동을 전개하며 공통으로 노동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추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공통의 문제 해결 노력 및 정책적 대안의 모색 노력 등이 기초가 됨으로써 양대 진영은 통합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계산과 같은 비정치적이고 비조직적인 사안에서까지도 연대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양대 진영의 즉각적인 통합의 요구는 선전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하겠다.

---

98) 이와 같은 한국노총측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5a)를 참조할 것.

## 제 7 장

###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

#### : 현안 및 방법론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서 연대활동이 직면한 현안 영역들과 요청되는 전략들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신사회운동들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대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먼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대의 방식 및 단계, 그리고 연대활동의 전개에 있어 지켜져야될 원칙들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 문제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 1. 연대의 방식과 단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연대하는 방식은 크게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들이 정당을 통하여 연대하는 방식과 정당을 통하지 않고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들이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정당을 통한 연대의 방식은 주로 좌파 정당을 포함한 진보적 정당이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며

상당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거나 현실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진보적 정당이 제공하는 연대의 공간과 틀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들이 연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당을 통한 연대의 방식도 스웨덴이나 브라질과 같이 좌파 정당 내에서 연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sup>99)</sup>와 영국, 이태리, 멕시코와 같이 정당을 매개로 하여 연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행도 가능하며 브라질의 노동자당(PT)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sup>100)</sup> 하지만 이러한 정당을 통한 연대의 방식은 좌파 정당을 포함한 진보적 정당의 역량과 발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이 단계로의 이행은 아직 시일을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당을 통한 연대의 방식의 전 단계인 직접적 연대의 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겠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들의 직접적 연대는 연대의 발전 수준별로 보았을 때, 사안별 연대, 정책연대, 조직적 연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들의 연대활동은 대체로 사안별 연대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정책연대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1) 사안별 연대

사안별 연대란, 특정한 사건의 발생과 쟁점의 등장을 계기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안별 연대란 연대에 참여하는 운동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직적 연계 없이 사안의 발생과 더불어 공동 대처를 위하여 형성되는 연대활동으로서, 대체로 사안의 소멸과 더불어 소멸되는 일회적 성격을 지닌 연대 방식이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

99) 해방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의 틀 안에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등이 연대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00) 브라질의 노동운동의 발달과 그 산물로 탄생한 노동자당의 내용 및 노동자당의 성격 변천에 관하여는 조돈문(1993), Sader(1987), Sader & Silverstein (1991)을 참조할 것.



의 개정을 위하여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한 경우나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연대활동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쟁점화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사안의 해결 또는 사회적 쟁점의 이동으로 인하여 일회적으로 끝나게 되는 연대활동들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사안별 연대의 경우에도 연대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사안별 연대활동의 산물로 사안별 연대의 방식에서 정책연대 또는 더 나아가서 조직적 연대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발생하는 사안과 쟁점이 보다 구조적인 뿌리를 갖고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안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사안별 연대는 더욱 지속되며, 이러한 경우 특히 정책연대나 더 나아가서 조직적 연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안들이 분산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동일한 운동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종의 사안들 각각을 중심으로 사안별 연대활동을 벌이는 경우 또한 정책연대나 조직적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sup>101)</sup>

## 2) 정책 연대

정책연대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상호 관심을 공유하는 영역에서 현안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입장을 상호 조율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연대활동을 말한다. 최근 들어 초보적 유형이나마 정책연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로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와 신인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생산현장에서의 간접적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적

101) 여성운동의 경우 여연의 출범을 살펴보면, 1984년과 1986년 사이 여성운동 단체들은 KBS 시청료 거부운동, 1-2회 한국여성대회,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의 사안별로 사안별 연대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여성운동 단체들이 다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다발적으로 사안별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들간의 연대는 더욱 공고하게 되며 결국 여연이라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연합체로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연대 방식의 발전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사이에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 등이다.

보다 전형적인 정책연대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이 공유하는 부문에 대하여 양 운동의 관련 기구들이 기존의 여건과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 모색하는 연대활동의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연대의 발전을 위하여는 노동운동의 조직적 유연성의 확대와 조직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환경보건과 직업병 예방이라는 공통의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산업안전보건부와 환경운동의 노동위원회가 동반자가 되어 공통의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 문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여성분과와 여성운동의 노동분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연대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연대가 가능하기 위하여 정책연대에 임하는 양 운동의 동반자들은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전문성과 쟁방간의 논의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러한 연대활동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외부단체들과의 연대 사안들을 동일한 창구를 통하여 접수·논의하는 구조는 개편되어야 한다. 물론 신사회운동의 경우에도 노동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경직된 조직구조를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나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기구들의 제도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3) 조직적 연대

조직적 연대란, 단순히 공통 관심 영역에 관한 관련 단체들의 정책적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통 관심 영역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들을 평가하고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해당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의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의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

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직적 연대에서는 공통 관심 영역의 문제점들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며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단계적 사업계획 까지도 수립함으로써 연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작업을 위하여는 연대 동반자들간의 조직적 연계망의 구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책연대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연대의 방식은 조직적 연대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운동의 산업안전보건부와 환경운동의 노동위원회간의 정책연대를 수행하는 공동 작업이 지속되고 관련 문제들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당면 사업과 제들을 모색하여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동원 등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연계망이 구축됨으로써 조직적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신사회운동은 일천한 역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쟁점화 하는 “영향의 정치”<sup>102)</sup>를 전개하여 왔다. 이제 신사회운동은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나름대로의 존재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신사회운동의 역할이 요구된다. 신사회운동은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제시한 정책대안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과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은 관련부문의 발전과 정책대안의 실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은 조직적 연대의 수준까지 발전해야 할 것이다.

---

102) 신사회운동의 전략과 노동운동의 전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영향의 정치와 개혁의 정치로 대조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조돈문(1996c)를 참조할 것.

## 4) 연대의 단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의 발전은 사안별 연대로부터 정책연대로, 정책연대로부터 조직적 연대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는 연대 양식의 발전 단계 및 가능성에 있어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경우 사안별 연대 단계에서의 연대활동조차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어 가장 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현재 사안별 연대 수준의 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개혁투쟁과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연대의 초보적 양상을 띠고 있는데 불과하나 사회개혁투쟁의 발전정도에 따라 연대방식의 획기적 발전도 전망될 수 있다. 한편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경우 사안별 연대의 수준 못지 않게, 정책연대 수준의 연대활동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에서의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민우회, 노동운동의 여성분과와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노동조합 연합체들과 같은 연계고리들이 정책연대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조직적 연대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직접적 연대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조직적 연대는 1994년 결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sup>103)</sup>와 같은 상설 연합조직체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시민협과 같이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들을 포괄하기 보다는 특정 성향의 단체들만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연합조직으로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연대조차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들 간의 영역별 정책조율이나 정책적 대안 모색과 같은 정책연대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합체 구성이란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하겠다.

정책연대와 조직적 연대가 발전한 기초 위에서만이 상설적인 연합체가 제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는 정책연대와 조직적 연대라는 단계를 거친 다음,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철회되

103) 시민협에 관하여는 경실련(1995: 279-293)을 참조할 것.

고 진보적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면, 연대 경험의 축적과 조직적 연계망을 토대로하여 진보적 정당을 매개로한 연대나 진보적 정당 내에서의 연대와 같은 당을 통한 연대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연대의 원칙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하여는 연대에 임하는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들에 일정한 원칙들의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 1) 전문영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신사회운동들의 경우 각기 전문성을 지닌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의 활동들을 충실하게 전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 위에서 연대활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신사회운동들도 자신이 문체제기한 사안들과 정책대안들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들의 운동 영역의 문제점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신사회운동 단체들도 해당 운동 영역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력의 결과로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만큼 한국의 신사회운동들은 발전한 것이다. 치고 빠지기식의 일회성 운동방식은 이제 운동단체로서는 무책임한 사업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더더우기, 모든 신사회운동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대의 운동내적 문제점은 제한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나 즉흥적이고 일회적 성격의 사업은 운동단체로서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인 동시에 무책임한 사업행태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sup>104)</sup>

104) 또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해당 영역의 운동단체들의 불신을 야기시킨다. 경실련에 의한 노동자회의 결성과 노동자들의 조직 사업에 대하여 노동운동단체들은 자신들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은 김태현이, 1995년 11월

개별 신사회운동은 각기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부문에 집중하여 자신의 고유한 사업 영역의 문제점들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타의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해당부문의 운동단체들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사안들에 한하여 연대하는 방식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2) 운동이기주의 극복

개별 신사회운동들은 제 나름의 운동의 목표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 신사회운동들의 정체성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운동들과 사회현상들을 자기 운동단체의 운동 목표와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함으로써 다른 사회운동들의 정책 방향과 모순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회운동들에 폐해를 끼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일례로, 경실련이 포항제철에 경제정의상을 수여한 것은 시민운동의 일침한 경험으로 인한 일회적 오류로 판단되며, 운동이기주의로 오해를 받을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례이다.

포항제철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기업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회운동들의 기준으로 볼 때 포항제철은 최악의 기업체로 선정될 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 포항제철은 개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협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결국 해체시킨 기업으로서 노동운동의 기준으로 볼 때는 노동운동 탄압의 대표적인 기업체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직업병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코크스 공장의 분진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비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분진의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를 이용하여 분진의 농도를 측정 발표케 함으로써 진폐증을 유발하는 작업조건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의 대기오염 및 형산강과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환경운동 단체들과 지

---

“한국사회 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운동단체들간의 불신의 증폭은 운동들간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본이라는 적대 세력들에 의한 분할통치를 가능하게함으로써 운동들이 공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주민들에 의하여 대표적인 환경오염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 한 기업체나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평가는 자기 운동중심적인 기준에서만 내릴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내려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운동들간의 정책연대의 수행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3) 운동패권주의와 비민주성 극복

노동운동과 제 신사회운동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은 공통된 관심 영역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타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에서 연대의 중심은 자기 운동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패권주의는 운동들간의 연대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 보다는 자기 단체의 홍보와 패권에만 집착하는 반운동적 자세이다. 연대에 참여하는 운동들은 각자가 나름의 운동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어느 운동도 다른 운동의 목표 달성과 패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운동패권주의는 연대활동의 수행에 있어서는 간사단체에 의한 운영상의 비민주성으로 표출된다. 연대대상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연대활동의 발의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간사단체는 참여단체들에게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청된다. 참여 단체들과의 의견 교환이나 의견 수렴 없이 간사단체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여단체들의 불신을 유발함으로써 추후의 연대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sup>105)</sup>

105)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여성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여협의 경우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은 성공적인 반면 비여성단체들과의 연대는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하여 항상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김금래 1996). 또한 여연은 전민련에는 가입하였으나 이후 국민연합이나 전국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로 민민운동과의 연대에서 경험한 비민주적 사업추진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특정 단체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비민주적 운영방식에 반발하여 이후의 국민연합과 전국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남인순 1996a).

#### 4) 연대남발 지양

연대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연대의 남발은 연대활동의 효과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단체들이 보유한 제한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연대활동의 남발은 주로 사안별 연대활동의 빈번한 발생으로부터 비롯되며, 따라서 이러한 연대활동의 남발은 연대방식이 정책연대나 조직적 연대의 단계로 발전함으로써 많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하겠다.

정책연대나 조직적 연대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사안별 연대는 필요하며,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참여하는 단체들의 규모와 성격들이 규정되고 참여하는 단체들의 참여의 정도도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만 연대활동의 남발로 인한 운동단체들의 자원의 고갈과 연대효과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 3.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안 영역들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개별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대처해야 할 현안 영역들을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는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을 망라하는 신사회운동 일반과 노동운동이 연대활동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현안 영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러한 신사회운동 일반과 노동운동이 우선적으로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 요청되는 현안 영역들은 사회제도 개혁, 방위비 삭감, 선거관련 정책토론, 신경영전략, 노동운동 지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 1) 사회제도 개혁

노동운동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조 진영 공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혀 물적 자원의 분배에만 관심 있는 집단이기주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특히 199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민노준은 1995년의 핵심 사업으로 사회개혁 투쟁을 설정하고 상반기 임금·단협 투쟁에서부터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국민연금 운영의 개선,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 및 재정 개혁,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교육제도의 개혁을 추가하여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하였다.<sup>106)</sup> 한국노총에서도 1995년 2월 민주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10대 기본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들 10대 과제들 가운데에는 경제민주주의 실현 및 경제제도의 개혁, 물가·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보장과 복지의 지속적 확충,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낙후부문의 중점지원 등과 같은 과제들을 포함시켰다.<sup>107)</sup> 이러한 한국노총의 사회제도 개혁 사업의 내용은 민노준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투쟁의 내용들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sup>108)</sup> 사회제도 개혁 활동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의 제고와 사회제도 개혁운동에의 동참은 그 동안 신사회운동측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로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또한 구체적 과제들의 내용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추진하여 오던 재벌 경제력집중 규제나 세제개혁 운동 등과 부합되며,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운동<sup>109)</sup>과도 상통하는 등, 신사회운동측이 전개해온 경제제도의 개혁,

106) 민노준의 사회개혁 투쟁의 준비, 전개과정, 구체적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관하여는 전노대(1994), 민노준(1995a; 1995b), 김유선(1996)을 참조할 것.

107)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의 재규정과 이와 더불어 설정한 10대 기본과제에 관하여는 한국노총(1995a; 1995b: 18-49)을 참조할 것.

108)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제도 개혁 내용은 1995년의 사업계획에 있어서보다 1996년의 사업계획에서 더욱 더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제도 개혁투쟁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사회제도 개혁투쟁에로의 수렴에 관하여는 조한천(1996)을 참조할 것.

109) 참여연대가 전개하고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에 관하여는 참여연대(1995b)를 참조할 것.

복지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은 향후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 가운데, 특히 이러한 사회제도 개혁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쟁을 전개한 쪽은 민주노조 진영이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하고 보험적용 의료행위의 확대를 통한 제도 개혁을 추구하였다. 국민연금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폐지하고 연금기금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세제 및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세의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이 90-100%인데 비하여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30%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고소득층에 비하여 노동자들의 세금부담률이 너무 높은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방위비를 동결하고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벌 경제력 집중과 관련하여서는 재벌그룹 특혜식의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지양하고 재벌그룹의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촉구하고 재벌들에 편중된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소기업을 부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사회개혁 투쟁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개혁 투쟁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노준은 사회개혁 투쟁을 단위 사업장 수준과 중앙의 수준에서 병행하여 전개하였다.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는, 단위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투쟁을 통하여 소속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들을 2-3가지 정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노사공동의 법개정 청원 등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단위 노동조합들의 요구는 주로 의료보험제도 개혁(104개 노조)과 국민연금제도 개혁(72개 노조)에 집중되었으며, 병원노련 소속 사업장들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들에서는 노사합의의 도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

의 수준에서는 3차례의 정책세미나의 개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선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전개된 사회개혁 투쟁은 단위 사업장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생산현장 밖의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개혁 투쟁이 1차년도의 사업에 있어 대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정부에 의한 사회개혁 투쟁의 합법성 부정으로 인한 탄압이다. 둘째는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사회제도 개혁 운동의 정당성을 홍보함으로써 집단이기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부족이다. 셋째는 1차년도의 사업으로 너무 많은 과제들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sup>110)</sup>

사회개혁 투쟁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 부정적 원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회제도개혁을 위한 신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이다.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노동운동은 정부의 탄압에 공동대처할 수 있고, 신사회운동이 다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개혁추진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영향의 정치” 전략의 수행에 효과적인 신사회운동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운동의 사회제도 개혁운동 전개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고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은 물론, 사회제도 개혁 자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신사회운동 단체들은 정부와 자본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의 사회제도 개혁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은 절실하게 요청될 뿐만아니라 상당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 2) 방위비 삭감과 복지증진

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위비의 과대한 비중에 비하여 사회복지를 위하여 책

110) 민노준이 추구하는 사회개혁 투쟁의 내용의 확대와 사회개혁 투쟁의 추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는 조돈문(1995c)을 참조할 것.

정되는 예산의 비중은 매우 경미하다. 1995년 정부 예산에서 방위비는 23%를 차지하는 반면 사회복지비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1)</sup> 이러한 예산 책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위비의 예산 비중을 쟁점화하기 시작한 것은 여연 등 여성운동단체들이었다. 여연은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 지출의 확대를 연계하여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1992년 9월 18일 ‘여성복지 확대와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연대회의는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가두홍보전, 국방위원들에 대한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편지쓰기, 방위비 삭감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평화를 위한 군축과 여성복지를 연계하여 여성운동에 평화운동적 성격이 가미된 초기의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활동은 방위비의 과도한 사용이 여성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94년 들어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을 여성복지 증진의 목표에만 한정시키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방위비 삭감운동의 목표와 내용이 변화되면서 1994년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활동은 여성운동 단체들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 단체 등 민민운동 단체들까지 포함하여 14개 단체들로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으로 재편되면서 운동의 목표와 연대활동의 폭이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8월에는 여연 등 여성운동 단체들과 전국연합 등 민민운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민노준과 참여연대가 가세함으로써 여성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민민운동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연대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12)</sup> 이러한 방위비 과다지출의 문제는 민노준이 사회개혁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세제 및 재정개혁의 과제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111) 1995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위비의 비중과 사회복지비의 비중의 산출, 그리고 방위비 예산의 증액을 동결했을 경우 정부 예산 연평균 증가율 13.5%를 적용하였을 경우 2000년도까지 각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는 액수의 산출에 관하여는 민노준(1995b: 23-24)을 참조할 것.

112) 여성복지와 연계하여 출범한 방위비 삭감운동이 성격의 변천을 거치면서 연대의 폭과 목표가 확대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여연(1993: 20-21; 1994: 21-24; 1995: 20-21)을 참조할 것.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운동과 더불어 전개하는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sup>113)</sup>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방위비 과다지출의 문제를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증대 필요성과 연계되어 있어, 노동운동으로서는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측의 “무노동 무임금” 전략에 대항하여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확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및 균형있는 재정정책의 실현이라는 운동목표와 부합되고 있어, 여성운동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민민운동과 더불어 연대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높은 현안 영역이라고 하겠다.

### 3) 선거관련 연대활동

다가오는 15대 총선과 이후의 선거들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노동운동 및 시사운동들의 연대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난 지자체 선거와 민주당의 분당으로 인하여 작금의 선거분위기는 정당들간의 정책대결 보다는 지역 할거의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정당들의 지역할거 정책이 맞물리면서 다가오는 선거들, 특히 임박한 15대 총선에서는 정당들과 후보자들에 의하여 지역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선거전략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등에서는 각기 제 나름의 기준으로 노동자후보, 여성후보, 녹색후보, 시민후보 등을 추천·지원하는 전략을 취하여 왔다. 이렇게 분산되고 상호 고립된 선거대응 전략은 개인들의 투표행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투표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하겠다. 노동자들은 노동자후보에 투표하고, 여성들은 여성후보에 투표하고, 환경운동 단체들의 회원들이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환경후보에 투표한다면, 분명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사회운동들이 연대하지 않고 상호 고립되어 독립적인 운동

113) 참여연대가 전개하는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에 관하여는 조흥식·김연명(1996: 7-8)을 참조할 것.

을 전개한다면, 표의 결집 보다는 표의 분산을 가져옴으로써 투표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투표 행위 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는 제 사회운동들이 연대하여 개별 운동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정당들과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된 정당과 후보들을 노동운동과 제 사회운동들이 연대하여 홍보·지원함으로써 투표를 통한 사회제도 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을 위하여, 정당들과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분야별로 정책과 공약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서 정책과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의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대활동을 위한 좋은 선례는, 경실련이 중심이 되어 14대 총선과 특히 14대 대선 과정에서 정당들과 후보자들간의 정책과 공약들을 비교하여 홍보하고, 노동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노동문제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정당 및 후보자들간의 토론회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의 비교와 후보자들간의 토론회를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4) 신경영전략과 자본의 공세

자본측은 국제경쟁의 심화와 경영합리화 전략의 명목으로 좁게는 신인사제도, 넓게는 신경영전략이라는 공세적 노동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신경영전략이란 식인 자본주의(predatory capitalism)의 전형인 일본의 “긴장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stress)”<sup>114)</sup>을 도입하려는 시도이며, 신경영전략의 실체는 생산현장의 노동통제 강화, 고용안정성의 훼손,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전략이다<sup>115)</sup>. 이러한 신경영전략은 산업현장에서의 민주화의

114) 일본식 생산방식의 특성에 관한 논의는 Skorstad (1994), Sewell & Wilkinson (1992), Yanarera & Green(1993)을 참조하고, 한국의 자본측에 의한 일본적 생산방식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하여는 원인성(1995), 박해광·유길중(1995), 정명호(1993)를 참조할 것.

역행, 간접적인 성차별,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의 증대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어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신사회운동 전반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 (1) 노동통제 강화와 산업민주화 문제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권의 독점자본 비호는 생산 부문에서의 노사관계를 노사간의 타협에 의한 해결 보다는 독점자본의 전횡에 전권을 맡기고 그를 국가권력으로 보호하여줌으로써, 생산 부문만은 민주화의 역정에서 배제된 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김영삼정권으로의 국가권력의 계승은 일정한 정도의 편차는 있으나 사회 각부문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지만, 생산 부문에서만은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 다를없는 “전제적 지배(despotic domination)”<sup>116)</sup>의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비민주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 신경영전략에 의한 노동통제 전략이다.<sup>117)</sup>

115) 신경영전략의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강석재(1995), 강신준(1995), 노민영(1994), 박석운(1994), 신병현·김도근(1993)을 참조할 것.

116)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계급의 계급지배 양식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헤게모니적 지배(hegemonic domination)” 양식은 노동계급에 의한 국가권력의 공유나 기업경영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바탕하여 계급지배가 행사되는 양식을 의미하며, 전형적인 예로서는 스웨덴을 꼽을 수 있다. “규제적 지배(regulated domination)” 양식은 국가권력의 공유나 경영참여로부터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나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방식의 계급지배가 행사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예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반면, 전제적 지배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지배를 위하여 억압적 권력에 의존하고 있는 지배 양식으로서, 대체로 제3세계의 사회들이 이에 해당된다. 전제적 지배양식은 특히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극단적인 양상을 표출하였으며, 민주화와 더불어 전제적 지배양식은 규제적 지배양식과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규제적 지배양식으로 이행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급지배 양식의 분류에 관하여는 조돈문(1994a)을 참조할 것.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현장 감독자들에 대한 권한의 이양이라는 명목 하에 생산현장의 감독자들인 직장과 반장들의 현장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현장의 직장과 반장들은 반원들의 생산성과 회사 방침의 추종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에 충실한 노동자들의 경우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는 호봉의 승급과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장 감독직에 의한 노동통제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며, 회사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편, 품질관리조(Quality circle) 활동의 강화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기업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제안을 내면 회사측에서 그러한 제안을 회사의 경영에 반영시킨다는 그럴듯한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품질관리조 활동이 실제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이나 생산방식의 변화 등 주요한 사안들은 경영 특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노동자들의 제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조를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기업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면, 품질관리조의 운영은 기업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유는 차단된 채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지침을 하달받는 경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허용되는 제안의 내용은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의 감소를 위하여 요구되는 노동자들의 작업동작의 변화나 생산 도구 사용법의 개선 등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 부문에서의 민주화의 역행 추세는 정부의 비호와 관련입법 제정 기도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노동강도의 강화와 생산 부문의 역민주화에 대처하여, 스웨덴과 독일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은 공동결정(co-determination) 제도와 같은 노동자의 경영참여(worker participation)와 팀작업(Gruppenarbeit)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의 전략이다.<sup>117)</sup> 노동

117) 신경영전략의 도입에 따른 노동통제의 강화와 산업민주주의의 역행에 관하여는 「전국 노동자신문」(1995.6.29; 7.13)과 「주간 노동자신문」(1995.6.27; 9.15; 10.13)을 참조할 것.



자의 경영참여는 민주주의 심화의 한부분인 생산 부문의 민주화로서 산업민주주의를 의미하고, 민주주의의 심화가 생산 부문에서만은 역행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이러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산업민주화는 시민운동이 주창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화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 진영 모두에서 1996년도의 중점 사업과제로 설정되고 있어<sup>119)</sup>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이부문에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생산현장에서의 간접적 성차별

1995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에도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불안정성 및 근로조건악화를 통한 간접적 성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근 자본측이 공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신경영전략의 일환인 신인사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노동력 전반의 고용안정성을 훼손하는 “외적 유연성(external flexibility)”<sup>120)</sup>이 증대되고 있

118) 스웨덴과 독일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동결정 제도와 노동자위원회(work council)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관하여는 Haas(1983), pontusson(1992), Turner(1991), Streeck(1992) 등을 참조할 것.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노동과정의 인간화를 통한 동기 부여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자본측에게도 긍정적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은 Cooke(1994), Schweickart(1992), Chmiel & Wall(1994) 등에서 잘 확인될 수 있다.

119)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참여를 1996년도의 주요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추세로 자리잡고있음은 조한천(1996), 김유선(1996), 어수봉(1995) 등에서 잘 확인될 수 있다.

120) 외적 유연성이란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이라고도 불리며, 내적유연성(internal flexibility) 혹은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과 함께 자본의 유연화 전략의 핵심을 구성한다. 내적 유연성이란 노동력의 다기능화를 의미하는 반면, 외적 유연성이란 고용 규모의 증감을 경영 특전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채용과 해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본측이 시장의 생산품 수요와 기업측의 경영성과에 맞추어 노동력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규

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성이 거부되고 해고의 위험이 높은부문에 여성노동력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정성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남성노동자의 임시직의 비율은 13%인데 반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임시직 비율은 18%로서 여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부문은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비중이 높은 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등이어서 신인사제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이 악화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주는 폐해는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121)</sup>

노동부 장관도 금융기관 등에 신인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이 승진을 제약받고 고용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간접적 성차별의 논란을 시인할 정도로 신인사제도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간접적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sup>122)</sup> 이와 같이 신경영전략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간접적 성차별은 근로자과건법 입법 시도와 더불어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 (3) 노동강도의 강화와 산업재해의 증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의 현재의 수준은 고사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1984년에 40.6시간이었고, 미국은 1978년에 38.3시간이었는데 반하여, 한국은 국민

---

모를 적절한 수준에 맞추는 한편, 개별 노동자들에 대하여 상대적 생산성과 기업 규칙 이행 등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해고 및 채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자본의 유연성 전략의 내용에 관하여는 Amin(1994)과 Grint(1991)를 참조할 것.

121) 산업현장에서의 신인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성노동자들의 간접적 성차별에 관하여는 「주간 노동자신문」(1995.11.7; 7.25)을 참조할 것.

122) 신인사제도의 도입과 노동시장에서의 간접적 성차별에 관하여는 「한겨레신문」(1995.12.28)과 「주간 노동자신문」(1995.10.20)을 참조할 것.

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있는 현재 노동시간이 47.5시간으로서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산업재해이다. 1994년 현재 산업재해자는 85,948명에 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산업되지 않은 산업재해 건수를 추가한다면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1994년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2,678명으로서 하루 평균 7.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만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집계된 직업병 환자들만 해도 6-7천명에 이르고 있어 직업병으로 판정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직업병 환자들까지 합산한다면 1만명은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sup>123)</sup>

이처럼 산재 사고와 직업병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신경영전략의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경영전략의 도입으로 우수반 선정 등을 미끼로 작업반 단위로 생산성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별로 생산성을 평가하여 능력 본위의 직능급에 성과급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변형근로제, 내부하청, 용역노동자 고용의 확대 등을 통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정성의 제고는 노동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조선업종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의 사망 등 중대 재해의 비율이 직영 노동자들의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증대 위협을 통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또한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영전략의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작업반 단위의 무재해 경쟁과 기업의 무재해 달성 목표의 부파로 무수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이 노동자들 자신들에 의하여 은폐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그 심각성의 정도조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하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작업조건의 열악화는 작업환경의 악화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생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123) 노동조건의 비교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수치들에 관하여는 「주간 노동신문」(1995.6.29; 8.18)과 장재연(1995:81)을 참조할 것.

취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생산현장을 넘어서서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까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신경영전략의 도입으로 인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의 악화에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제 8 장

### 연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

: 맺음말에 대신하여

여기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연대발전을 위한 전략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연대간의 차별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신사회운동 일반과 노동운동의 연대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연대의 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에 대한 제언을 정리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 1. 연대간 차별성 및 차별적 전략의 필요성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의 경우 운동의 활성화 정도와 개별 연대내부 문들간의 불균등 발전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연대의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매우 부진한 동시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개별 연대내의부문별 발전정도에 있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경우 경제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과 노동운

동에 대한 지원의부문들 사이에 비교적 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 일반의 노동조건부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문제 일반에서의 연대활동은 매우 부진하여, 부문간 불균등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부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간의 연대에 있어서는, 반핵 부문의 경우보다 노동운동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큰 환경보전 부문에서도 연대활동이 거의 전개되지 않고 있으나, 전국 수준에 비하여 지역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간의 차별성은 연대별로 발전되어 있는 정도, 연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에서의 차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연대들이 당면한 연대 발전 수준과 연대발전의 가능성 및 제약 조건들에 적합한 전략들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의 경우,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노동운동 지원 부문에서 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대활동도 매우 활성화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연대의 발전은 노동자들도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심화, 경제체도의 개혁, 복지수준의 증진 등 시민운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때문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발전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적합한 당면 현안 영역들을 발견·규정하는 것과 노동운동의 정치·경제 체도를 포함한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정부와 자본이 전개하는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 하겠다. 그외에도, 주요한 당면 현안 영역들로 총선 등 선거에서의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활동, 비자금을 통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전경련을 해체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의 경우, 전반적인 연대활동의 역사와 활성화 수준에 있어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문제나 노동자 일반의 문제와 관련한 부분의 연대활동은 매우

활발한 반면 이러한 연대활동이 여성문제 일반에서의 연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시 되는 것은 노동운동의 관심의 확장이며, 무엇보다도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은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영역의 문제점들 대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채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영역에 있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생산현장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 무력하다는 점과 모성기능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본과 정부측의 생리휴가 무급전환 기도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여성노동자들과의 관련성이 높은 노동자 일반의 문제 영역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근로자과견법의 제정이 일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을 들자면, 첫째는 여성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의하여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둘째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노동조건을 향상 위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시된다는 점, 셋째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연계하는 조직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계 조직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운동부문내에서 여성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여성위원회 등이며, 여기에 더하여 노동조합 연합체들 가운데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병원노련,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전문기술노련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경우 연대활동은 반핵부문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부문에서도 매우 부진하였다. 전반적으로 저발전되어 있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문제이며, 둘째는 연대활동의 모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대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첫째는 노동자는 공장지역의 주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의 작업자로서 작업현장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업

공해의 최대의 피해자라는 점, 둘째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산업공해와 생산현장에서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이윤추구 전략이라는 원인을 공유한다는 점, 셋째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집단이기주의의 화신인 자본가들, 특히 독점자본이라는 공통의 적대 세력에 의한 분할지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연대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환경운동조직의 집행부에 포진시키며 특히 노동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환경운동이 특정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부터 노동운동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특정 사업을 초기부터 공동 추진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연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환경운동이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생산현장내 작업조건의 유해성을 측정·조사하여 작업조건의 개선을 유도하고 직업병 판정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배달녹색연합이 활용하였던 환경기행 등 휴식과 교육을 겸비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2.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 방향

앞에서 살펴본 노동운동과 개별 신사회운동의 연대활동들이 연대의 발전 수준 및 각기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제약에 기초하여 연대별로 적절한 전략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에 적용되는 전략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의 연대에 적용되는 전략으로서의 연대 방식의 단계, 연대의 원칙들, 연대의 현안 영역들을 들 수 있다.

연대방식의 단계로서는 사안별 연대, 정책연대, 조직적 연대, 당을 통한 연대의 단계를 들 수 있다. 사안별 연대는 대부분의 현행 연대활동이 처해 있



는 단계로서 특정 사안의 발생과 쟁점의 등장을 계기로 연대활동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정책연대는 사안별 연대가 거듭됨에 따라 연대의 참여자들이 쟁점화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공통 관심 영역에서의 단체별 입장들을 서로 조율하며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여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조직적 연대는 정책연대가 발전하여 공통 관심 영역에 관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함으로써 당면 과제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공동 모색하여 운동간의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연대의 단계이다. 이러한 사안별 연대, 정책연대, 조직적 연대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직접 연대하는 방식들에 속하며, 상당한 영향력과 잠재력을 갖춘 좌파 정당 혹은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당을 통한 연대로 발전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당을 통한 연대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하겠다.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하여는 연대에 참여하는 모든 운동단체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첫째, 개별 신사회운동 단체들은 각기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고유 영역의 사업에 충실해야 하고 해당 영역의 개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시키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은 상호 운동의 목표와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기 운동의 기준을 배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타 운동들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운동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만 운동들간의 상호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셋째, 연대에 참여하는 운동단체들은 참여의 목표인 공통의 관심 영역의 개선에 충실하여야 하며, 연대활동 추진의 주도권에만 집착하는 운동패권주의와 연대활동 추진에 있어 의견수렴을 무시한 비민주적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연대활동의 남발은 운동단체들이 보유한 제한된 인적·물

적 자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연대를 필요로 하는 최대의 현안 영역들로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민주노총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개혁투쟁, 한국노총이 설정한 10대 기본과제,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 경실련이 추진해온 제반 경제제도의 개선 등은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단체들도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바도 있어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일반이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되는 영역이다.

둘째, 방위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하여 환경보호, 모성기능보호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부문들에 대한 예산책정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방위비의 삭감 혹은 최소한 동결을 통하여 환경, 여성, 노동을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예산지출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지역주의 투표와 지역할거주의가 15대 총선에서도 지속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처하여, 지역 연고가 아닌 정책 대결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공약들을 비교하는 홍보물의 배포, 경제·여성·환경·노동 등 사회 제 분야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정리하여 후보자들의 공개적 이행 약속의 유도, 제반 정책들 및 공약들의 현실성 및 실현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당 관계자들 및 후보자들의 토론회 개최 등은 경실련이 지난 14대 대선시에 실시하였던 사업들로서, 노동운동과 제반 신사회운동들이 연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넷째, 자본이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경영전략은 현장감독자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에 의한 제안을 노동강도의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중요한 사안들은 제안 대상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 신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적 유연성 전략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훼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포진되어 있는 비중이 높으므로, 결국 여성노

동자들에 대한 간접적 성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신경영전략의 도입에 따른 반별 경쟁의 강화, 개인별 경쟁의 강화, 고용불안정성의 증대는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의 안정성과 위생성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봉쇄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발생 자체를 노동자들 스스로 은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노동운동에 대한 제언 :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자세와 역할은 위에서 정리한 운동이기주의 극복, 운동패권주의 지양, 연대 남발의 자제 등 연대의 일반 원칙들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보편적 연대의 원칙들에 추가하여, 신사회운동과의 연대 발전을 위하여 개별 신사회운동들에 의하여 요청되는 노동운동의 자세와 역할들이 있다.

첫째, 노동운동은 물질자원의 배분을 넘어서 사회문제 일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노동문제는 중요하고 다른 문제들은 이차적 문제라는 식의 자기 운동중심주의적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셋째, 연대의 발전 및 개별 연대활동의 성공을 위하여 노동운동의 일정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된다.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비리들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차별의 발생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천에 대한 감시·감독자의 역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성분과 불법처리 여부에 관한 환경감시단의 역할 등이 요구된다. 신사회운동 단체들은 노동운동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강령을 통해 명시화하고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연대활동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모든 외부 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대한 창구 일원화는 사안별 연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개별 신사회운동 단체들과 공통 관심 영역에서의 정책연대와 조직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겸비한 위

원회들(예컨대 사회제도개혁위원회, 여성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구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과의 연대의 최대의 걸림돌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의 분열이다. 노동운동의 통합이 시일을 요하는 만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과도기적 단계로서 연대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 상호 배제하지 말아야 하며, 연대활동을 비노동문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문제들까지 확대하여 정책연대와 조직적 연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신사회운동 단체들에서 민주성과 자주성의 결여를 이유로 연대대상으로서 기피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신사회운동들에 의한 기피와 고립을 피하고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성과 자주성을 고양하는 과감한 내부 혁신을 선행해야 한다.

## &lt; 참고문헌 &gt;

## ◦국내 문헌

- 강남식(1994), “여성문제의 기원과 본질”, 한국여성연구회(1994), 『여성학강의 : 한국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 강석재(1995),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 영남노동연구소, 『신경영전략 : 이렇게 맞서자』,(영남노동연구소).
- 강선희(1995), “<노동과 건강연구회> 대표 김은희 : 산재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환경운동』,(12월호).
- 강신준(1995), “신경영전략과 인사·임금제도”, 영남노동연구소, 『신경영전략 : 이렇게 맞서자』,(영남노동연구소).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0), 「경실련 출범 1주년 기념자료집」.
- \_\_\_\_\_(1991), 「경실련 출범 2주년 기념자료집」.
- \_\_\_\_\_(1993), 「경실련 출범 3주년 기념자료집」.
- \_\_\_\_\_(1994), 「경실련 출범 4주년 기념자료집」.
- \_\_\_\_\_(1995), 「경실련 창립 5주년 기념자료집 : 깊어진 시민의식, 넓어진 시민운동」.
- 국민회의(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1994),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결성대회」자료집.
- 권기백(1993), “울산을 지키는 환경감시단 다섯번째 소식”,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통신』,(제6호).
- 김금래(199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영희(1994), “여성해방론의 여러 흐름”, 한국여성연구회(1994), 『여성학강의 : 한국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 김유선(1996), “1996년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노동·시민·사회단체

- 공동정책 워크숍 : '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 (1996.2.6).
- 김제남(1996), “배달녹색연합”,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남인순(1996a), “한국여성단체연합”,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남인순(1996b), “96년 여성운동의 과제와 노동운동과의 연대과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워크숍 : '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 (1996.2.6).
- 노민영(1994), “‘희망 90년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희망찾기”, 「우리네 일터」, 제7호(1-2월).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1995), 「여성고용할당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3차 정책포럼」.
- 민노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1995a), 「민주노총 건설화 하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
- 민노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1995b), 「1995년 임·단추와 사회개혁투쟁 지침」.
- 박기남·강이수(1994), “여성과 노동”, 한국여성연구회(1994),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 박석운(1994), “신경영전략과 노조의 대응”, 일하는 사람들의 토론모임 발표.
- 박해광·유길정(1995), “대우자동차의 신경영전략 : 일본적 생산방식 모방운동”, 서울노동정책연구소 준비모임, 『일본적 생산방식과 작업장체제』, (새길).
- 박현철(1995), “재벌 편드는 반환경정책 : 심화되는 지역간 환경분쟁”, 「환경운동」(9월호), 42-48쪽.
- 배달녹색연합(1995), 「'95 대의원 총회 자료집」.
- 서경석(1992), “경실련 3년의 평가와 반성”, 「사회평론」, 8월호.
- 서경석(1993), “경실련 운동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1993), 「경실련 출범 3주년 기념자료집」.

- 서경석(1995), “경실련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1995), 「경실련 창립 5주년 기념자료집 : 깊어진 시민의식, 넓어진 시민운동」.
- 성낙진(1995), “환경과 사람 : 녹색시민상 수상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행규”, 「환경운동」(1월호), 118-119쪽.
- 신병현·김도근(1993), “자본합리화 운동의 신경향 : 기업문화전락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가을호).
- 신철영(199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어수봉(1995),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 연대원리에 기초한 참여전략”, 한국노총,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노동운동」.
-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1990), 「제4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1991),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1992),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1993),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1994),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1995),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 여협(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 \_\_\_\_\_(1995), 「제37차 정기총회 : 1994년도 사업보고, 1995년도사업계획안」.
- 오영식(1994), “이제는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야 할 때이다”, 「국민통신」,(제4호).
- 울산환경운동연합(1995), 「정기총회('95년도 자료집)」.
- \_\_\_\_\_(1994), 「정기총회('94년도 자료집)」.
- 원인성(1995), “일본적 생산방식의 국내 도입 및 활용현황 그리고 그 정착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노동정책연구소 준비모임, 『일본적 생산방식과 작업장체제』,(새길).
- 윤정숙(1994).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특징과 21세기 여성운동의 나아갈 길”,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심포지움.

- 이대훈(1996),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 사회운동의 연대 I: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득연(1994), “환경운동의 동향과 새로운 방향 설정: 전문환경운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23호(겨울호).
- 이목희(1994), “국민회의(추)의 정치·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 『국민통신』,(제4호).
- 이성근(1994), “포철 광양제철소의 [송암회]: 섬진강 살리기, 우리가 말합니다”, 『환경운동』,(6월호), 140-141.
- 이승희(1994a). 『여성운동과 정치이론』.(녹두).
- 이승희(1994b), “여성과 정치”, 한국여성연구회(1994),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현실의 이해』.
- 이시재(1996), “노동·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제언”,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워크숍, “'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1996.2.6).(?)
- 이은영(1994), “법과 여성현실”, 한국여성연구회(1994),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현실의 이해』.
- 장재연(1995), “‘환경경영’ 뒤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환경운동』,(11월호).
-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1992). 「개혁과 전진의 길: 사회개혁의 방향과 당면과제」.
- \_\_\_\_\_(199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제3기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 자료집」.
-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1994), 「'94 전국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수련 대회 자료집」.
-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1), 「전노협 1990년도 사업보고」.
- \_\_\_\_\_(1992), 「전노협 1991년도 사업보고」.
- \_\_\_\_\_(1993), 「전노협 1992년도 사업보고」.
- \_\_\_\_\_(1994), 「전노협 1993년도 사업보고」.
- \_\_\_\_\_(1995), 「전노협 1994년도 사업보고」.



- 정명호(1993), “일본적 생산방식의 국내도입실태와 적합성”, 「동향과 전망」, 제19호(봄·여름호).
- 정자환(1996), “노동운동 속의 성의 정치 :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 조돈문(1993),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적변천 : 신노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형성”, 「동향과 전망」, 1993가을(통권20호). 123-154.
- \_\_\_\_\_ (1994a),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봄호).
- \_\_\_\_\_ (1994b), “계급형성과 계급연합 : 미국, 스웨덴과 비교하여 본 한국의 계급별 이데올로기적 편차”, 「동향과 전망」(1994 여름).
- \_\_\_\_\_ (1995a), “기업관련성과 환경의식 : 울산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95b), “멕시코 노동운동의 이중구조와 신사회운동의 상호관련성”,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5년도 하반기 학술발표회, 9.30, 한국고등교육재단.
- \_\_\_\_\_ (1995c), “노동운동과 사회적 관심 :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향하여”, 시민단체 공동토론회, 「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_\_\_\_\_ (1995d), “전평 노동조합들과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동향과 전망」, (여름호).
- \_\_\_\_\_ (1996a), “한국인의 정치사회의식”, 「한겨레신문」 새해특집, 1996.1.1.
- \_\_\_\_\_ (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_\_\_\_\_ (1996c),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와 한국의 신사회운동”, 조돈문 (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조순경(1993), “여성고용 불안정과 정부정책의 이중성”,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노동의 현실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조순경·이숙진·이난영(1992),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회, 「한국 여성연구 3: 일과 성」, (청하).
- 조한천(1996), “96년 정책, 제도개선 방향”,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워크숍, 「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 (1996.2.6).
- 조홍식·김연명(1996),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와 정책 과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워크숍, 「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 (1996.2.6).
- 참여연대(1995a), 「참여연대 제1회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1995b), 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운동을 시작하며.
- 최예용(1994), “오염기업에 맞서는 불매운동”, 「환경운동」(6월호), 56-60.
- 통계청(1994). 1993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1). 「1990년도 사업보고」.
- \_\_\_\_\_(1992). 「1991년도 사업보고」.
- \_\_\_\_\_(1993). 「1992년도 사업보고」.
- \_\_\_\_\_(1994). 「1993년도 사업보고」.
- \_\_\_\_\_(1995a). 「자주·민주·개혁! 노총의 도약」.
- \_\_\_\_\_(1995b).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 (2월).
- \_\_\_\_\_(1995c). 「1994년도 사업보고」.
- 환경운동연합(1993), “현장답사: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어떻게 버리나”, 「월간 환경」, (7월호), 64-69.
- \_\_\_\_\_(1994). 「1993 환경운동」.
- \_\_\_\_\_. 「1994 환경운동」.
- 황상규(1996), “환경운동연합”,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황석만(1996), “노동운동의 신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 조돈문(1996b)(편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lt;외국 문헌&gt;

- Amin(ed)(1994), *Post-Fordism : A Reader*,(Oxford : Blackwell).
- Buttel, Frederick H.(1987), "New Directions in Environmental Sociology", *Annual Reviews of Sociology*, vol. 13, 465-88.(Buttel 1987 : )
- Chmiel, Nik and Toby Wall(1994). "Fault Prevention, Job Design, and the Adaptive Contro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3 : 4. 455-473.
- Cooke, William N.(1994). "Employee Participation Programs, Group-based Incentives, and Company Performance : A Union-Nonunion Comparis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 : 4.
- Dwivedi, O.P.(1986), "Political science and the environ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09.(Dwivedi 1986 : )
- Grint, Keith(1991), *The Sociology of Work : An Introduction*.(Yale).
- Haas, Ain(1983). "The Aftermath of Sweden's Codeterminatio Law : Workers' Experience in Gothenbury, 1977-1980",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4. 19-46.
- Hartmann, Heidi I(1979),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 Class*, #7.
- Humphrey, Craig R. & Frederick H. Buttel(1982), *Environment, Energy and Society*,(Humphrey & Buttel 1982). 양종희 · 이시재 옮김(1995), 『환경 사회학 : 환경 · 에너지 · 사회』,(사회비평사).
- O'Conner, James(1988), *Capitalism, Nature, Socialism : A Theoretical Introduction*. 이강원 옮김(1993),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 이론적 서설』, 공간과 사회, 3호(12월).
- Pontusson, Jonas(1992), "Unions, New Technology, and Job Redesign at Volvo and British Leyland", in Miriam Golden & Jonas Pontusson(eds), *Bargaining For Change : Union Politics in North America and Europe*,(Ithaca : Cornell University).

- Redclift, Michael(1984),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 Red or Green Alternatives?,(Redclift 1984). 강현수 · 이상현 · 장윤희(윤희김)(1993), 『발전과 환경위기』,(한울).
- Sader, Emir(1987), "The Workers' Party in Brazil", New Left Review, #165.
- Sader, Emir and Ken Silverstein(1991), Without Fear of Being Happy : Lula, the Workers Party and Brazil,(London : Verso).
- Schnaiberg, Allan & Kenneth Alan Gould(1994), Environment and Society : The Enduring Conflict,(N.Y. : St.Martin's Press).
- Schweickart, David(1992), "Economic Democracy : A Worthy Socialism That Would Really Work", Science and Society, 56 : 1. 9-38.(?)
- Sewell, Graham and Barry Wilkinson(1992). "Someone to Watch over Me' : Surveillance, discipline and the just-in-time labour process", Sociology, 26 : 2. 271-289.
- Skirbekk, Gunnar(1994), "Marxism and Ecology", Capitalism Nature Socialism, 5 : 4.
- Skorstad, Egil(1994). "Lean Production, Conditions of Work and Worker Commit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5 : 3. 429-455.
- Spence, Martin(1993), "The Politics of the Second Contradict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4 : 2.
- Streeck, Wolfgang(1992), Soci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Studies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Newbury : Sage).
- Turner, Lowell(1991), Democracy at Work : Changing World Markets and the Future of Labor Unions,(Ithaca : Cornell Univ.).
- Yanarella, Ernest J. and William C. Green(1993). "The UAW and CAW Confront Lean Production at Saturn, CAMI, and the Japanese Automobile Transplants", Labor Studies Journal, 18 : 3.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21세기 푸른 울산」,(울산환경운동연합), 해당호,(1995-).

「경상일보」해당일자.

「국민통신」,(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해당호.

「녹색마을」,(울산환경운동연합), 1995년 해당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당일자.

「부산일보」해당일자.

「울산매일」해당일자.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통신 : 맑은 하늘, 푸른 산, 깨끗한 물, 좋은 삶을  
추구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환경운동연합), 해당호,(1993-1995).

「전국 노동자신문」,(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해당일자.

「주간 노동자신문」해당일자.

「참여사회」,(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해당호.

「한겨레신문」 해당일자.

「환경운동」,(환경운동연합), 해당호.

## ▣ 보고서를 마치며 ▣

본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 가운데 어느 한 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 양 진영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끝까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라는 프로젝트를 노동운동 진영에서 발주하였다는 점과,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신 중앙연구원의 어수봉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모두 해당 운동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여 토론에 임하여 주셨으며, 해당 운동단체의 사업과 경험을 정리하는 논문까지 기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짧은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하여 그동안 무리하게 빠른 추진속도를 통하여 부담을 가중해 드린데 대하여 거듭 사죄를 드린다. 단체 참여자들의 글과 토론은 발표된 자료들의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연대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 부분에서는 특히 그분들의 제언들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연구보조원으로 일해 주신 안혜성님은 참여자들의 바쁜 일정에 따른 프로젝트 일자의 수시 변경과 연락의 부담, 충실한 자료 수집 및 뛰어난 자료의 정리는 연구보조원에게 요구되는 역할 이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안혜성님의 헌신적인 노력은 책임연구자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연구자의 무능을 은폐할 수 있었다. 안혜성님의 뛰어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설문조사 조사원으로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반복적

전화와 확인 작업을 하여준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조사원 작업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책임연구자가 학과 교수라는 위계적 관계 때문이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필자의 글에 대하여 값진 토론을 주신 중앙연구원 어수봉 원장님, 민주노총 김태현 집행위원님, 경실련 유재현 사무총장님, YMCA 김성수 정책연구부장님, 환경운동연합 이치범 사무처장님, 여연 정강자 노동위원장님,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처장님, 민변 조용환 변호사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필자의 초고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귀중한 비평을 주신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과 조은 교수님, 가톨릭대 이영자 교수님과 정자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의 노력의 소산으로, 우리는 값진 내용의 두 편의 보고서를 낼 수 있었다. 그분들의 노력, 특히 운동단체 참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본 보고서가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보고서를 연대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드리는 제언으로 마쳤으며, 그러한 제언들은 본 프로젝트의 발주자인 노동운동측이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실천만이 단체 참여자들의 노력에 보답하고, 나아가서 노동운동 자체의 발전 및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본 프로젝트 참여 단체들을 포함하여, 최근 연대활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고양되는 분위기는 연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함과 더불어 본 프로젝트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한다.

1996년 2월 '산중호걸'을 들으며,

조 돈 문

**▲ 프로젝트 참여자 ▲**

## · 책임연구원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공동연구원

황석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대리)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연합 전 조직국장)

이대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금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김제남 (배달녹색연합 사무부총장)

## · 연구보조원

안혜성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저자약력]

• 조 돈 문 •

조돈문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가톨릭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동 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Working Class Formation in the Third World : A Comparative Study on Union Accountability and Worker Experiences in South Korea (1910s-1940s) and Mexico (1870s-1910s)”이며, 논문의 일부가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경제와 사회(1994 봄호) 등에 게재되었다. 기타, 주요논문으로는 Erik Olin Wright와 공저한 “The Relative Permeability of Class Boundaries to Cross-Class Friendship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Canada, Sweden, and Norwa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February 1992),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적 변천 : 신노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형성” 동향과 전망 (1993 가을), “계급형성과 계급연합 : 미국, 스웨덴과 비교하여 본 한국의 계급별 이데올로기적 편차” 동향과 전망 (1994 여름),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 구미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경제와 사회(1995년 겨울호)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관심 영역은 산업, 노동, 계급, 사회운동 등이다.

---

##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I

---

1996년 3월 18일 인쇄

1996년 3월 25일 발행

---

발행인      朴 仁 相

---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

등 록      81. 8. 21 (13-31호)

---

인 쇄      (주)우정미디어  
(代) 02-324 -9762

---

값 : 7,000원